



2017 한국평화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

세계 공동체 위기와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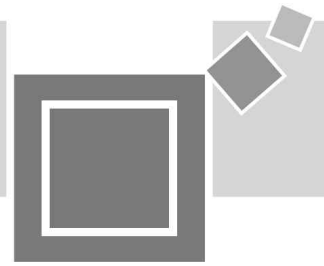
일시 2017년 3월 17일(금)13:30~18:30

장소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본관606호)

주최 한국평화종교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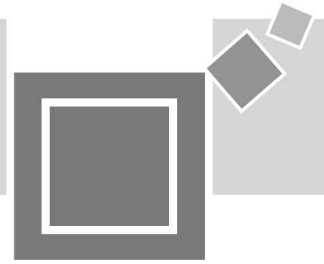
주관 선문대학교 선학평화연구원

프로그램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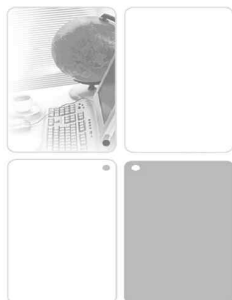


일시	행사내용
13:3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및 등록 • 장소 : 국제회의실(본관 606호)
14:00-15:00	<p style="text-align: right;">■ 좌장 : 주재완 (선문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선언 • 학회장 인사 : 이재영 (한국평화종교학회 회장) • 환영사 : 황선조 (선문대 총장) • 기조강연 :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세계화시대와 세계국가론
15:20-16:30	<p>분과 1 _ 종교와 평화세계</p> <p style="text-align: right;">■ 좌장 : 김항제 (선문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김병호 (한국외대) 브렉시트로 본 걸프(Gulf)지역 노동시장과 유가와와의 상관 관계 분석 안연희 (선문대) 문선명 선생의 이상사회론과 세계공동체 비전: 국경철폐와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 토론 : 이원삼 (선문대), 도현섭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16:50-18:00	<p>분과 2 _ 국제정치와 평화세계</p> <p style="text-align: right;">■ 사회자 : 이수석 (한국평화연구학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전광호 (전북대) Brexit and the Future Implications for Europe: Starting of the New Debate in Security Analysis 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파장과 우리의 시사점 • 토론 : 오영달 (충남대), 고경민 (제주대)
18:00-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li style="text-align: right;">■ 좌장 : 조규성 (한경대)
18:30-19:30	석식

목 차



■ 기초강연	1
• 기초강연	3
_ 정윤재(한국학중앙연구원), 세계화시대와 세계국가론	
■ 분과 1 _ 종교와 평화세계	19
• 발표	21
_ 김병호(한국외대), 브렉시트로 본 걸프(Gulf)지역 노동시장과 유가와의 상관 관계 분석	
_ 안연희(선문대), 문선명 선생의 이상사회론과 세계공동체 비전: 국경철폐와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 토론	59
_ 이원삼(선문대), 도현섭(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 분과 2 _ 국제정치와 평화세계	67
• 발표	69
_ 전광호(전북대), Brexit and the Future Implications for Europe: Starting of the New Debate in Security Analysis	
_ 김영준(국가안보전략연구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파장과 우리의 시사점	
• 토론	115
_ 오영달(충남대), 고경민(제주대)	



기조강연

기조강연 정윤재(한국학중앙연구원)
세계화시대와 세계국가론

세계화시대와 세계국가론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세계화, 핵전쟁, 그리고 인류파멸의 위기
2. 약화되는 내셔널리즘과 국민국가
3. 세계국가에의 비전과 그 가능성
4. 맺음말: 새로운 연구주제들

1. 머리말: 세계화, 핵전쟁, 그리고 인류파멸의 위기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불린지 오래다. 민족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여전하지만,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문제해결의 고리로 삼는 논의는 보기 어렵다. 그 대신 국제주의나 글로벌리즘 혹은 지역차원의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도발적인 도전이 최근 미국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이다. 물론 필리핀의 투테르테 대통령과 같은 비강대국가들에서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차원의 관심과 개입, 그리고 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민족국가중심의 고립주의적 선택이 현 상황의 대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전히 세계화에 따른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건설까지를 강조하는 흐름이 여전히 대세라고 보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찍이 역사연구가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적 국제정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이념경쟁이 극에 이르면서 강대국들이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실전배치하면서 상대방을 분쇄하고자 하지만 이는 곧 인류파멸이라는 인류사적 비극만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들이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국가들에 맞서 인류를 공멸시킬 핵무기까지 동원하여 “자유투쟁”할 필요가 있느냐면 서 차라리 “서구 여러 나라가 소련의 세력 하에 굴복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존속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¹⁾ 고 공언할 정도로 핵전쟁에 의한 인류역사의 종말을 우려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종말론이 유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답하면서 인류가 역사적으로 축적해오고 온 “카르마”(karma), 즉, 업보(業報)인 전쟁 그 자체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 조만간 “핵무기에 의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것으로 인해 인류는 “자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²⁾ 사실상, 지난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국제정치는 토인비 박사의 경고가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하고 있다. 즉, 2차 대전 말기에 핵무기를 개발하여 제국주의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여 승전함으로써 이후 핵무기 생산과 활용을 주도했던 미국은 핵무기확산금지 조약(NPT)을 통해 핵무기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제하고자 노력해오고는 있지만, 이미 핵무기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파카스탄, 인도 등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 골고루 퍼져 공급되어있으며 최근에는 북한까지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시험을 하며 스스로 핵보유 국가임을 자처하고 있다. 작년에 미국과의 협상으로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선언했던 이란이지만 국제정치적 상황이 변화하면 그러한 약속은 순식간에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토인비 박사는 핵전쟁이 인류생존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대재앙임을 경고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인류생존을 위해서는 오로지 “세계정부” 혹은 “세계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³⁾ 그는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하고 세계에 진정한 영구적인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배후에 있는 정신적 존재”와 교류하고 우리의 의지를 그것에 조화시킴으로써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세계적인 정신의 혁명” 혹은 “종교적 혁명”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각국의 국민들이 자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그대로 “세계정부의 최고주권에 종속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⁴⁾ 그리고 토인비 박사는 일찍이 세계사는 여러 문명권의 국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경쟁하면서 “단일화”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컬럼버스가 1492년 오랜 항해 끝에 미대륙을 발견한 이후 1500년을 기점으로 역사는 인류의 생활

1) G. R. 어반/P. 토인비 편, 최혁순 역, <미래에의 좌표: 토인비와의 대화> (삼중당, 1977), 325, 365쪽. <미래에의 좌표>로 인용함.

2) Arnold J. Toynbee/원창엽 역, <토인비와의 대화>(홍신문화사, 1994), 274-277쪽. 이후 <토인비와의 대화>로 인용함.

3) 토인비 박사의 세계정부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다음을 참조바람. Yoon-Jae Chung, “Arnold Toynbee’s Theory of World Government: An Analysis of his Visions, Diagnosis, and Prescrip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40, no. 4(2006. 12), pp. 7-31.

4) <토인비와의 대화>, 278-279쪽.

세계를 단일하게 만드는 이른바 “세계화”과정을 거쳐왔다고 보았다. 먼저는 대양항해를 통해 유럽이외의 지역들인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등 동남아시아들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역과 문물교류가 시작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인도지역에서 칭기스칸의 후예로 몽골제국을 창건했던 바부르황제(1483-1530)는 인도대륙의 동서지역을 육로로 제패함으로써 당시 세계를 단일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았다.⁵⁾ 여기서 토인비 박사가 말하는 단일화란 오늘날의 세계화에 의해 강화되는 현상으로서,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세계화를 역사상 처음으로 성취했던 나라는 유럽의 네덜란드나 영국이 아니라 3세기 칭기스칸의 몽골제국이었으며⁶⁾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16세기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함께 시장경제와 산업화가 확산시켰다. 그리고 특히 컴퓨터와 장거리통신망, 그리고 각종 정보공유시스템의 활발한 보급과 활용으로 오늘의 세계는 토인비 박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단일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오늘의 국제정치는 기후변화와 같은 총체적인 지구상의 변화와 함께 점차 ‘하나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토인비 박사는 세계국가의 건설을 통한 세계평화 구현에 저해요인으로, 언어, 인종, 사회적 인습, 그리고 문화 차원의 상이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예컨대, 네덜란드의 복수언어정책이나, 기독교문화에 유대인문화와 그리스/로마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동아시아국가들은 각자의 고유문화와 함께 중국의 유교문화와 인도의 불교문화를 함께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⁷⁾ 이 짧은 기초발표에서 세계공동체의 평화적 건설과 관련된 토인비 박사의 모든 논의를 감당한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 그동안 세계단일화 현상이 지속되어 오는 동안 세계평화와 인류생존에 관심을 가졌던 주요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되었었던 민족주의(nationalism)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 문제, 그리고 세계정부(world government) 혹은 세계국가(world state)에 대한 견해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평가할 것이다.⁸⁾ 그리고 나서 앞으로 세계평화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연구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5) Arnold J. Toynbee 저 강기철 역, <시련에 처한 문명>(일지사, 1982), 8-84쪽. 이후 <시련에 처한 문명>으로 인용함.

6)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돌베개, 2010).

7) <토인비와의 대화>, 302-306쪽.

8) 필자는 이미 발표했던 논문 “글로벌리즘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그리고 대한민국”(김영작 편, <한국 내셔널리즘의 전개와 글로벌리즘>(백산서당, 2006), 469-494쪽)을 통해 이러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그리고 세계국가론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한 바탕에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대립구조 및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구한 적이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제2절과 제3절의 내용은 이 논문의 일부를 다시 활용한 것임을 밝힌다.

2. 약화되는 내셔널리즘과 국민국가

18세기 근대 국민국가시대가 열린 이후 적어도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는 내셔널리즘의 시대를 구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수많은 정치적 격변과 함께 산업혁명, 과학기술혁명, 지리상의 발견, 제국주의적 식민지 확보 경쟁, 세계규모의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의 형성, 개인인권과 자유의 신장, 등으로 인류의 공동체 형성 단위와 범위는 기존의 국민국가로 국한될 수 없게 되었다. 또 국민국가는 그 자체의 존립이 심각하게 도전받게 되었다는 평가가 흔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지구적 파장의 하나로 오늘날 “국민국가는 생활상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⁹⁾ 그래서 필자는 우선 역사학자 E. H. 카아의 내셔널리즘과 국민국가의 미래에 대한 견해와 오늘날 갈수록 국가의 기능이 거대해지기는 하지만 새로운 도전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미래경영학자 P. 드러커의 견해를 살피고자 한다.

(1) ‘역사적 존재’로서의 국민국가 : E. H. 카아

에드워드 카아(Edward H. Carr, 1892-1982)는 구체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와 세계평화의 문제를 내셔널리즘에 입각해서 분석했던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였다. 그는 국제사회란 어떤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의 조약 혹은 전쟁의 수단으로 그것을 조절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場)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세계평화는 국제연맹이나 세계정부 같은 인위적인 기관을 만들어 국제법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해서 실현되기는 어렵고 대신, 갈등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냉정한 거래와 힘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그 실마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¹⁰⁾

그런데 카아는 근대시기를 품미했던 근대 국민국가(modern nation-state)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에서 적어도 다음 2가지 차원에서 그 존재가 도전받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도덕

9)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1973); 서규환 역, 『2000년대의 신세계질서』(디자인하우스, 1991), 52-55쪽 참조.

10) 진덕규, “국제정치학에 대한 E. H. Carr의 관점: E. H. Carr저, 진덕규 역, 『민족주의와 그 이후』(학문과 사상사, 1984), 98-104쪽 참조.

적 차원에서 오늘날 국가라는 조직체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 성격을 고유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권위체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남녀 개인의 복지와 권리를 옹호하는 데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도덕적 확신에 근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는 날로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점차 그 기능과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즉, 기술의 발전은 군사나 경제적 조직단위로서의 국가의 의미를 약화시켰으며, 점차 효과적인 결정과 통제능력은 “거대한 다국적 조직단위들”(great, multi-national unis)로 급격하게 이동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서 카이는 국민국가란 가족과 같이 자연적(natural)이거나 생물적(biological) 집단이 아니며, 그 구성원인 개인들은 각자의 자연권(natural rights)을 소유했지만, 국가는 자연권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국가가 근대시기를 풍미했던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인 역사과정으로 볼 때, 그것은 근대라는 특정시기에서만 존재했던 현상이며, 또 전 세계 지역에서도 특정지역에만 존재하는 사실에 불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근대 국민국가란 “하나의 역사적인 집단”(a historical group)인 것이며, 이제는 국가라는 집단이 정치전략의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최고의 담당자이며, 세계차원의 조직에 있어 궁극적인 구성단위”라고 주장하는 내셔널리즘적 주장과 요구는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았다.¹¹⁾

한편, 카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의 성격과 형태는 분석적으로 3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다수의 독립주권국가들이 산재한 국제질서, 하나의 세계적 권위체가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태, 그리고 다수의 독립주권국가들과 하나의 세계적인 권위체가 절충한 상태가 그것인데, 카이는 이 셋 중 만약 세 번째의 절충형태가 나타날 경우 — 그것은 다민족국가들(multinational states)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각 문명권(civilizations)의 힘에 따라 다른 형태로 존재할 것이며, 또 이 문명권들은 전통적 의미의 국가단위의 영역 속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카이는 앞으로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세계국가적 연합의 형태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구호나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혹은 장엄한 의식과 함께 하는 선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평범하면서도 조금도 시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이슈를 다룰 때는 관련 국가들이 조용히 만나 특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은 국제 협력 방식이며,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위원회나 국제평의회 등을

11) 같은 책, 51-52쪽 참조.

우선 만들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다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제반문제들의 해결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힘을 얻을 것이며, 결국 각국의 내셔널리즘 성향도 약화시키고, 배타적인 독립주권 의지도 서서히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¹²⁾

그러나 카이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¹³⁾ 특히, 그는 어떠한 권력구조의 세계질서여야 하는가? 특정 세계 기관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의 결정은 누가 혹은 어떤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가? 등이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로운 국제질서는 제도적인 구상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으며, 이는 범세계적인 사회정의의 추구와 같은 공동노력이나 진취적인 정신에 기초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¹⁴⁾

(2) 존립 자체가 도전받는 ‘거대’ 국민국가들 : P. 드러커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1989)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미래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 이후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1993)란 책을 통해 앞으로 인류가 접할 미래의 사회는 결코 마르크스가 예견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며, 그것은 ‘비사회주의 사회’(non-socialist society)이고 동시에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post-capitalist society)라고 단언했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는 시장경제가 계속 남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지식근로자’와 ‘서비스근로자’로 대체된다. 또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가 여전히 조직의 사회가 될 것이지만, 그것은 기존의 주권국가가 유일한 정치적 통합체가 더 이상 아닌 시대다. 기존의 국민국가들은 범국제적 조직들, 지방조직들, 지방정부들, 종족집단들 등과 함께 공존하며 또한 경쟁한다. 그리고 드러커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지상에는 후기자본주의 사회가 출현했는데, 이 시기 동안 국민국가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현실들에 의해 그 존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¹⁵⁾

그런데 드러커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국민국가들은 당초 절대군주들의 자의적인 행동에 맞서 개인들과 시민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그 정부의 기능

12) 같은 책, 52, 65-66쪽 참조.

13) 같은 책, 67-68쪽.

14) Kenneth W. Thompson, *Masters of International Thought*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0); 정진위 역, 『현대국제정치사상』(박영사, 1989), 106-107쪽.

15) Peter Drucker 저, 이재규 역,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한국경제신문사, 1993), 23쪽.

이 점차 국가전반적인 부분으로 확대되어, 결국 근대 국민국가들은 그 기능과 영향력의 범위가 커진 이른바, 거대국가(megastate)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즉, 과거 장 보댕(Jean Bodin)이 구상했던 국민국가는 재산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유지를 그 첫째 기능으로 삼는, 따라서 지극히 방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실체였지만, 오늘날의 국가들은 적어도 1970년부터 과거의 국가들과 같은 종(種)이기는 하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대한 실체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거대국가적인 면모가 가장 약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시민의 재산은 국가의 처분에 달려 있을 정도로 국가는 시민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존재가 된 것이다. 드러커에 의하면, 국민국가의 거대화 현상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본다는 복지국가를 지칭하는 ‘유모국가’, 미국의 대공황 이후 국가는 조세를 징수하여 시민사회의 유지와 소득재분배를 위해 각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집행하는 ‘경제지배자’ 혹은 ‘조세국가’로, 그리고 평화 시에도 전쟁을 대비하며 시민사회와 시민경제를 통제하는 ‘냉전국가’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각 시기마다 이 거대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성과들을 낸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차원의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정의 실현에는 대체로 실패했다.¹⁶⁾

그런 한편 오늘날 국민국가들은 시민사회에 비해 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새롭게 등장한 국제적 흐름의 대세로 그 존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우선 지구차원으로 확대된 시장경제체제에서 “돈과 정보는 조국을 모른다.”는 말이 시사하듯, 오늘날 돈과 정보의 흐름이 단위 주권국가의 통제밖에 있는 지 이미 오래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이미 세계시장으로 흐르고 있는 돈 흐름의 향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으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또한 국민국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사실상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초국가적 기관들의 영향력은 국민국가들의 그것보다 훨씬 막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오염, 테러리즘, 군비통제의 필요성 등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점점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단위 국가들의 주권제약에 관한 심각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¹⁷⁾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권 국민국가들은 지역주의(regionalism)와 종족주의(ethnicism)에 의해서도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지역주의는 유럽공동체(EC)에 의해 촉발되었고, 그 파장은 현재 북미대륙과 아시아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오늘의 지역주의가 당장 국민국가를 대체하는 현실이 아니고 또 당장 그럴 만한 초대형 국가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의가

16) 같은 책, 187-213쪽 참조.

17) 같은 책, 214-225쪽 참조.

경제적 블록화현상과 함께 점점 “주권국가를 꿈쩍 못하게 만든다.”¹⁸⁾ 그리고 종족주의가 지구적 차원에서 유행하면서 기족의 국민국가들은 안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내의 수그리질 줄 모르는 인종분규, 소련의 분열 및 현 러시아 내에서의 종족 간 갈등,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 캐나다의 인종대립, 스페인의 카스틸라와 카탈로니아의 대립,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의 민족주의적 대립, 등으로 세계는 바야흐로 종족주의 혹은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다.¹⁹⁾ 드러커는 그렇지만 국민국가들이 이 같은 다양한 위협과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국가가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정치조직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만 “국민국가가 이제 더 이상 절대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닐 것이다”고 단언했다.²⁰⁾

3. 세계국가에의 비전과 그 가능성

그런데 앞서 논의한 대로 내셔널리즘의 효용성이 약화되고 국민국가의 위상이 전과 달리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과 그와 관련된 현실적 변화들은 곧장 국제정치상의 적지 않은 혼란과 무질서를 동반하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국민국가가 앞으로의 세계에서 대규모 경제문제나 새로이 태동할 지구적 경제체제에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국가적 이해관계’는 계속 남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점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각 부문에서 지구화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현실 속에서 이른바, ‘정치’를 어떻게 재배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과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²¹⁾ 그리고 21세기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기동력 있게 최대로 만족시켜주는 ‘유목상품’(nomadic objects)의 생산과 판매가 산업의 주종을 이루는 ‘초공업사회’(super-industrializ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견했던 자크 아탈리(Jacque Attali)는, 오늘의 세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돈의 법칙’에 얽매이고 글로벌리즘과 함께 내셔널리즘이 득세하여 “다가오는 세계질서는 위협에 가득할” 것으로 단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질서는 시장과 돈이 숭배되어 갈수록 경제적

18) 같은 책, 225-229쪽 참조.

19) 같은 책, 229-235쪽 참조.

20) 같은 책, 33쪽.

21) Daniel Bell, “The Future Worder Disorder: The Structural Context of Crises,” Daniel Bell, 서규환 역, 위의 책, 57-58쪽.

요인의 사회, 정치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²²⁾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계정치상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구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기된 바 있는 ‘세계정부’ 혹은 ‘세계국가’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 볼 것이다.

(1) “국가의 역설”과 세계정부론 : 칼 W. 도이치

칼 도이치(Karl Deutsch)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로서 탁월한 행태주의적 사회과학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보기 드물게 중후한 ‘사상의 대가’다운 면모를 보였던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상아탑에만 머물지 않고 미국무성의 요청으로 인도,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워싱턴, 도쿄, 리우데자네이로 등지를 바쁘게 오가며 각종 연구임무를 정열적으로 수행했다. 그는 대표저서 중 하나인 『내셔널리즘과 사회 커뮤니케이션』(1963)에서 서유럽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여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내셔널리즘이 왜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만 폭넓은 반응을 받으면서, 다른 상황에서는 왜 불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지구적 차원에서 “지난 수십 년간 벌어진 사건들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향을 보였는가? 아니면 세계를 이전보다 더 분열시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²³⁾

그 결과, 도이치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내셔널리즘의 전개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음을 발견하고, “정착이 이루어지고, 도로시설의 확장과 커뮤니케이션의 개선, 그리고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거주집단들이 서로 소통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단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이치 교수는 내셔널리즘의 발달은 곧 “커뮤니케이션 공동체의 형성이며, 비교적 성공적인 정치통합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결론지었다.²⁴⁾ 그러나 도이치는 지구적 차원에서 “불평등과 불안성의 극단적인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만연한 빈곤이 산업화와 생활수준과 교육의 향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셔널리즘이나 민족분열의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면, 인간은 종말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다”는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²⁵⁾

22) Jacque Attali, 유재천 역, 『21세기의 승자: 다가오는 신세계질서에서의 도전과 응전』(다섯수레, 1993), 143-144쪽 참조.

23)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New York: John Wiley, 1953), v-1쪽.

24)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Its Alternatives* (New York: Alfred A. Knopf, 1969), 6,19쪽.

25) 같은 책, 29쪽; 정진위, 앞의 책, 163쪽.

그러나 도이치 교수는 국민국가가 앞으로 점점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 갈 것으로 생각했다. 즉, 도이치는 미래에 개별 국가들이 핵전쟁이나 환경공해 같은 지구적 차원의 재난으로부터 해당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회피하기 어렵게 될 경우, 국가들은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이른 바, “국가의 역설”(the paradox of nation-state)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했다.²⁶⁾ 그에 의하면 이제까지 국가는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거나, 각종 요구를 들어주는 유일한 기관이었지만, 스스로 “국민들의 잠재적 죽음의 함정이 되지 않으면서(without becoming potential deathtraps for citizens),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전면전쟁이나 그와 유사한 수준의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 교수는 앞으로 정치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these same nation-states cannot defend the lives of their people)는 역설적인 상황이 오게 될 것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다른 한편, 도이치 교수는 국민국가를 국제 정치사회의 기본단위로 여겼던 근대 내셔널리즘 시대 이후를 논하면서, 앞으로의 신세계질서를 분석적으로, “로컬리즘과 자유방임적 상태”(localism and laissez-faire), 그리고 “세계정부에의 비전”(the vision of world government), 등 2가지 차원에서 검토했다. 먼저, 그는 장차 세계는 로컬리즘과 각종 구속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자유방임적 상태가 일반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를 벗어나려는 또 다른 형태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 경향을 보이며 각종 규제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며, 세계경제는 보다 방임적인 상태에서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후생복지와 교육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이 아니고 돈 많은 개인자선가들의 사업에 의존하게 되어 국가나 정부의 기능은 초보적인 법질서 유지와 전쟁억지 및 평화보장의 범위에 국한되는 고전적인 “야경국가”의 수준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도이치는 이러한 형태의 자유방임적 야경국가는 비대해진 사회세력들과 경제집단의 도전에 매우 취약하며, 더 많고 더 좋은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비판했고, 궁극적으로 이 같은 상태는 정치적 파산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분석적으로 가능한 내셔널리즘의 미래는 세계정부의 수립이다. 여기서 도이치는

26) Karl W. Deutsch, 앞의 책, 171쪽.

27) 같은 책, 172쪽.

“제한적 세계정부”(a limited world government)와 “광범위한 책임을 수반한 세계정부”(a world government with a broad scope of the responsibilities)를 상정하여 검토했다. 먼저 제한적 세계정부는 과거 로마군단이 로마제국 전체를 통치했던 것처럼, 군사면 군사, 경제면 경제 어느 한 부문만 장악하여 세계질서를 담당, 관리하는 세계정부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정부 하에서의 각국 정부는 특정부문만을 제외하고 웬만한 문제와 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도이치 교수는 이 같은 제한적 세계정부가 비록 가능성이나 실현성을 있을지 몰라도,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치상황에서는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도이치 교수는 광범위한 책임을 수반하는 강력한 세계정부를 상정했다. 이 경우 세계정부는 말 그대로 정치, 경제, 군사, 전쟁,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정책과 문제해결을 책임지는 것이다. 도이치 교수는 그러나 이같이 강력한 세계정부의 가능성은 적어도 다음 2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첫째, 오늘날 세계는 이같이 막대한 업무를 담당, 처리할 수 있는 인적·제도적·지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여 막상 그러한 세계정부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정치, 행정적으로 당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이같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계정부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상위직 공무원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의 순환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2) “지구국가”(global nation)의 필요성 : S. 텔보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칼럼니스트를 지냈고,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으로 외교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깊게 참여한 바 있던 스트로브 텔보트(Strobe Talbott)는, 1992년 7월 20일자 『타임』에 “지구국가의 탄생”(The Birth of Global Nation)이란 장문의 칼럼을 통해 앞으로의 세계질서에 대한 그의 견해를 압축하여 피력했다. 그는 근대국가란 조직은 결코 영구불변한 공동체 형태가 아니며 앞으로 세계는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세력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로 될 것이며, 그 연장으로서 등장할 “지구국가”는 미국을 모델로 하여 민주주의와 연방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상론하면 다음과 같다.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질문은 국가들을 통합시키는 세력과 반대로 서로 분리시키는 세력 중 어느 편이 더 강력하게 세계정세를 주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분열보다는 통합현상이 대세를 이루어 21세기말쯤이 되면 “국가”(nationhood)란 존재는 사라질 것이고, “세계시민”(citizens of the world)이란 말이 보다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국가란 영구불변의 존재가 아니고 “인위적이고 순간적인”(artificial and temporary) 존재이며,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는 “사회적 장치”(social arrangement)의 하나이다. 오늘날 세계 186개국 중 10%에 해당되는 국가들만이 혈연적 동질성을 유지할 뿐, 그 외 국가들은 여러 종족들이 섞여 사는 “다종족국가”(multinational state)이다. 이 국가들은 이전의 제국(empires)들과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통한 타국 점령과 대외팽창을 기도하여 세계는 국가들 사이의 지속적인 전쟁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비록 이제까지의 경험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류는 세계평화와 그것의 실현을 위한 세계정부의 창설에 길고 진지한 논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4세기 이래 단테, 에라스무스, 그로티우스와 같은 선견지명이 있는 학자들은 국제법의 시행으로 국가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만약, 세계 각국들을 공통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보편이데올로기”(a universal ideology)가 있다면 각 국가들의 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영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 1795년 임마누엘 칸트가 “민주국가들 사이의 평화연맹”(a peaceful league of democracies)의 창설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세계평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정부의 창설이란 차원으로 진전된 것은 금세기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지나간 이후의 일이다. 각종 수송 및 통신기술이 발전, 확산되면서 세계는 전보다 훨씬 더 작아졌고, 국제무역이 성행하고 국가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이 되었지만, 국가 사이의 갈등은 훨씬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 1945년 히로시마에서 보듯, 힘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은 패자는 물론이고 그 승자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아인슈타인, 간디, 까뮈, 토인비와 같은 지도적인 지식인들까지도 단위국가들의 당장의 가시적인 이익보다도 그 사위의 차원에 해당되는 이익에 더 많은 정치적 관심을 기울이자는 의견에 찬동했다. 그 결과 2차례의 세계대전이 있는 후, 1920년대에 국제연맹이, 1940년대에 국제연합이 각각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나치독일과 소련의 팽창주의적 전체주의가 극성했을 때는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고 세계는 분열되었다. 세계정부를 논하는 사람들은 의심받기 십상이었고,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하나의 세계 옹호자”(one worlder)란 말은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나 비밀 공산당원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멸적인 용어였다. 그러

다가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양 진영이 서로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정책을 펴으로써,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고, 국가주권이 집단안보 논리에 의해 약화되었다. 또 자유진영국가들은 서로 협력하여 다국적 금융기관들을 창설하고 서로 자발적으로 일정 정도의 주권을 포기했다. 그 사이에 유럽공동체(EC)는 지구주의(globalism)를 향한 지역통합(regional cohesion)을 선구적으로 이루었다.

또 각국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이 일상화되었고, 오늘날 WTO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하나로 통합된 세계”(a united world)를 여는 전도사와 같은 존재들이다. 국제기구들의 개별 국가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 1992년 리우환경지구정상회담에서 환경문제에의 공동대처를 위해 모리스 스트롱(Maurice Strong)이 제안한 “초월적 자연주권”(the transcending sovereignty of nature) 개념은 참석자들에 의해 반대 없이 받아들여졌다. 컴퓨터의 보급과 장거리통신기술의 발달과 보급은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했으며, 새로운 국가들의 등장과 종족분리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서도 ‘권력화’(empowerment) 현상은 소단위 지방과 지역,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조직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지구적 통합의 추세 속에서 장차 세계질서는 막강한 중앙집권형태의 정부보다는 민주주의와 연방제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정부로 다스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칸트가 구상했던 세계평화론과 통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각 주정부 및 개인들의 자유가 주어지는 가운데 연방체제는 효율적으로 제도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이 “다종족 연방국가”(a multinational federal state)로서의 미래 세계정부의 훌륭한 모델이다. 만약 미국을 모델로 하는 세계정부의 형태가 정착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발휘했던 지혜가 오늘날까지 연장됨을 의미하여, 세계정부 내의 미국 국민들은 각별한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이상 앞절들에서 소개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앞으로 신세계질서에서 내셔널리즘과 국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것이고, 신세계질서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나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핵전쟁으로 파멸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기 위한 제도적 처방으로 제시했던 세계정부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세계정부의 성립과 그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그것이 제한된 정부형태이든, 강력한 정부형태이든, 칼 도이치 교수에 의해, 세계정부 성립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문제점들 — 즉, 인적, 지적, 제도적 기반의 미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문제

— 이 오늘날에는 크게 해소되었고 또 이 문제들은 갈수록 발전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능력으로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내셔널리즘이 약화되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줄어들어 가는 가운데 앞으로 세계정부의 형성은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이 선호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도권 쟁탈과 해당 국가들의 생존을 둘러싼 매우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4. 맺음말: 새로운 연구주제들

—이상과 같은 검토와 관찰을 바탕으로, 세계공동체와 평화구축이라는 인류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과제들을 탐색할 때, 우리는 토인비 박사가 이미 제안했던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즉, 토인비 박사는 세계 단일화 경향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첫째, 서구문명사가 인류사회의 단일화에 공헌했던 내용에 대한 연구, 둘째, 역사를 “인류전체의 역사”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기존의 경제사나 정치사는 종속적 위치로 후퇴해야 하고 대신 “종교사”가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⁸⁾ 또 그는 무엇보다도 인류전체사적 전망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주제들을 적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통해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고자 했던 제국들의 역사와 이러한 시도들의 사상적 배경들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고대 아랍제국, 앗시리아제국, 바벨론제국, 페르시아제국, 로마제국, 신성로마제국 등과 함께, 현대의 EC 등을 새롭게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대부터 이어져오는 중국의 천하사상과 천하일국론,²⁹⁾ 칸트의 영구평화론, 칸유웨이의 <대동세>, 글렌 D. 페이지의 <비살생 정치학>³⁰⁾ 등 세계차원의 공동체 형성과 평화구현에 필요한 사상과 전략들을 담고 있는 여러 선행 연구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또한 지구단일화 혹은 세계화를 가속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인 기후변화가 21세기 인류생활상에 어떠한 변화를 ‘강요’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계평화 구현에 필요한 대안은 무엇인지, 또 그와 같은 초국가적인 요인들이 두드러지고 축적될 때 세계국가의 정치적 성격은 어떠할지 따져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일찍이 토인비 박사는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해

28) <시련에 처한 문명>, 118쪽 참조.

29) 중국의천하관과 천하일국론에 대해서는 이춘식, <중국패권의 뿌리와 이념>(고려대출판부, 2014).

30) 이에 대해서는 글렌 D. 페이지 저, 정운재 역, <비살생정치학: 세계평화를 위한 신정치이론>(백산서당, 2007); 안정시 편, <비살생정치학과 지구평화운동>(집문당, 2004).

결책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제한적인 자유방임이나 극단적인 통제가 아닌 중용지도(中庸之道)를 찾는 데서 그 단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³¹⁾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인간은 위기에 처하면 무정부상태보다는 덜 악하다 하여 독재정치를 수용한다고 주장했음³²⁾을 상기할 때, 핵전쟁의 공포와 더불어 지구온난화와 같은 요인들로 인한 충격이 세계적 차원에서 보다 확산해질 때, 인류는 과연 중용지도에 따라 신세계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그런데 토인비 박사는 앞에서 쓴 바와 같은 중용지도에 의한 위기해결책이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소련이 각자 핵무기를 포함한 거대한 물리력(物理力)을 보유하고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³³⁾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미한 소리”³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오늘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단서는 역시 아직도 기독교나 기타 고등종교의 메시지에서 오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음성과 그 행위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느 모퉁이에서 오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³⁵⁾ 라고 말했다. 이같은 토인비 박사의 견해를 고려하여,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타난 인류역사의 주재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과 인류전체사에 대한 일관된 기록들을 자세하게 살펴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혹시 다른 종교적 경전에도 성경에서와 같은 인류전체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 볼 수 있을 것이다.

31) 〈시련에 처한 문명〉, 41-42쪽.

32) 〈토인비와의 대화〉, 1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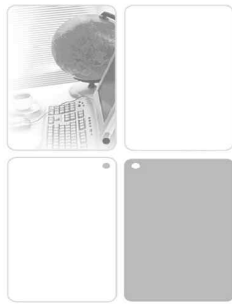
33) 〈시편〉, 19장 4절.

34) 〈열왕기 상〉, 19장 12절.

35) 〈시련에 처한 문명〉, 42쪽.

참고문헌

-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돌베개, 2010).
- 중국의천하관과 천하일국론에 대해서는 이춘식, <중국패권의 뿌리와 이념>(고려대출판부, 2014).
- 진덕규, “국제정치학에 대한 E. H. Carr의 관점:” E. H. Carr저, 진덕규 역, 『민족주의와 그 이후』(학문과 사상사, 1984), 98-104쪽 참조.
- 토인비 박사의 세계정부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다음을 참조바람. Yoon-Jae Chung, “Arnold Toynbee’s Theory of World Government: An Analysis of his Visions, Diagnosis, and Prescrip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40, no. 4(2006. 12), pp. 7-31.
- Arnold J. Toynbee 저 강기철 역, <시련에 처한 문명>(일지사, 1982), 8-84쪽. 이후 <시련에 처한 문명>으로 인용함.
- Arnold J. Toynbee/원창엽 역, <토인비와의 대화>(홍신문화사, 1994), 274-277쪽. 이후 <토인비와의 대화>로 인용함.
- Daniel Bell, “The Future Worder Disorder: The Structural Context of Crises,” Daniel Bell, 서규환 역, 위의 책, 57-58쪽.
-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1973); 서규환 역, 『2000년대의 신세계질서』(디자인하우스, 1991), 52-55쪽 참조.
- G. R. 어반/P. 토인비 편, 최혁순 역, <미래에의 좌표: 토인비와의 대화> (삼중당, 1977), 325, 365쪽. <미래에의 좌표>로 인용함.
- Jacque Attali, 유재천 역, 『21세기의 승자: 다가오는 신세계질서예의 도전과 응전』(다섯수레, 1993), 143-144쪽 참조.
-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Its Alternatives* (New York: Alfred A. Knopf, 1969), 6, 19쪽.
-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New York: John Wiley, 1953), v-1쪽.
- Kenneth W. Thompson, *Masters of International Thought*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0); 정진위 역, 『현대국제정치사상』(박영사, 1989), 106-107쪽.
- Peter Drucker 저, 이재규 역,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한국경제신문사, 1993), 23쪽.



분과 1_ 종교와 평화세계

발 표 김병호 (한국외대)

브렉시트로 본 걸프(Gulf)지역 노동시장과
유가와외의 상관 관계 분석

안연희 (전문대)

문선명 선생의 이상사회론과 세계공동체 비전:
국경철폐와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토 론 이원삼 (전문대)

도현섭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브렉시트로 본 걸프(Gulf)지역 노동시장과 유가와외의 상관 관계 분석

김병호 (한국외대)

목 차

- | | |
|------------------------|-----------------------------------|
| 1. 서론 | 6. 유가에 따른 해외 이주 노동자 송금액
변화량 분석 |
| 2. 걸프 지역 산유국의 경제 현황 | 7. 결론 |
| 3. 선행 연구 | 8. 참고문헌 |
| 4. 연구 방법 및 방법론 | |
| 5. GCC 산유국 내 이주 노동자 현황 | |

1. 서론

영국 현지 시간으로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하여 EU의 재정이 악화하였고, 이에 따른 영국의 EU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였다. 이에 더하여 취업 목적의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시리아, 이라크 등 정세가 불안한 중동 지역 국가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가속화하자 EU 탈퇴에 대한 여론이 커져갔다. 일각에서는 중동 지역으로부터 유럽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고에서 주목할 것은 이주 노동자다. EU 내에서 경제 대국인 영국으로의 이민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저렴한 인건비로 인하여 영국 자국민의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다. 영국 국내 여론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면서 브렉시트를 가속화 시켰고 브렉시트 찬반 투표 결과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자국민 실업률 상승이 신고립주의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자국민 실업률을 낮추려는 움직임은 유럽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걸프(Gulf)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제이션

(Saudization)이라 불리는 자국민 우대 고용정책을 2013년에 실시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여 있는 해외 기업이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하고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적으로 추방함으로써 생산성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 공사현장 등에서 대부분의 노동력을 차지하고 있던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이 나가고 고임금 자국 인력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이 EU 연합 탈퇴가 결정됨으로써 이러한 신고립주의는 걸프 지역 내에서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유가가 지속되고 산유국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줄이기 위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걸프 지역 내 해외 노동력과 유가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저유가가 지속될수록 해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고 걸프 지역의 신고립주의 정도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2. 걸프 지역 산유국의 경제 현황

2014년부터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산유국의 재정은 2015년에 들어서면서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GCC 주요 산유국의 2015년 재정 적자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 980억 달러, 쿠웨이트 271억 달러, 카타르 128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1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COFACE 2015, 3-4). 원유 시장은 이란에 내려진 경제 재제가 해제되면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EU 중앙은행 측이 저유가에 대하여 대응하겠다는 발표 이후 40달러 선으로 유가가 회복되었지만, 러시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회복세가 다소 꺾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집단 해고 조치를 시작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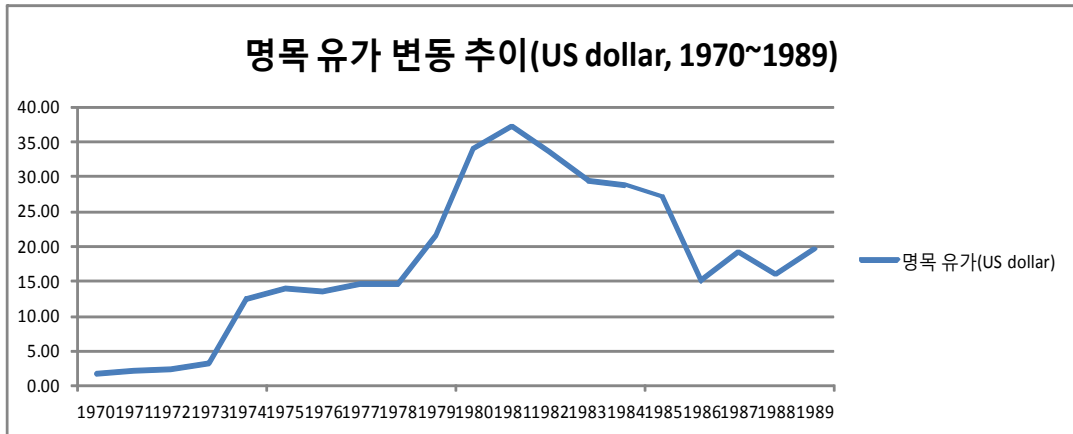
저유가에 타격을 받아오던 산유국들은 2016년 12월,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와 러시아 등 비(非)OPEC 11개 산유국은 산유량을 감축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OPEC 회원국은 일평균 120만 배럴, 비 OPEC 회원국은 일평균 55만 8,000배럴씩, 일평균 총 175만 8,000 배럴을 감산하게 된다. 합의한 감산량은 세계 원유 생산량(하루 9,720만 배럴)의 1.8%를 차지한다. 2017년 첫 거래일인 1월 3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Western Texas Intermediate)와 북해산 브렌트유(Brent) 가격은 감산에 따른 기대 효과로 각각 55달러를 돌파하였고, 두바이유 또한 50달러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말 배럴 당 40달러 중반에 머물던 유가에 감산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에너지 관련 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의 예측에 따르면, 산유국의 감산이 이행될 경우 2017년 상반기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가가 60~70달러 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OPEC 회원국과 비OPEC 국가들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에서 갓 벗어난 이란과 내전으로 시름하고 있는 시리아와 리비아 등 증산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가 있어 감산 합의가 얼마나 이행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미국 내 셰일오일 및 가스 산업을 압박하던 저유가의 빚장이 풀리고 시장에 셰일오일 및 가스 물량이 쏟아진다면, 유가 상승 추이가 다소 완만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 하면서 석유 수출이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의 산유국의 경우 석유 수출로 인한 달러 수입이 이전과 같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는 GCC 산유국에 재정적 부담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는 GCC 국가의 재정 수입 대비 원유 및 가스 수출액 비중이 높은 것에서 기인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재정 수입 대비 원유 및 가스 수출액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 89.5%, 쿠웨이트 92.1%, UAE 84.4%, 카타르 56.3%를 기록할 만큼 원유 및 가스 부문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한국무역협회 2015, 5). 따라서 저유가는 석유 중심의 산업이 발달해 있는 GCC 산유국에 재정 적자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한 비석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GCC 산유국은 1970년 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 시기에 석유 수출을 통하여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왔다. [그림 1]의 1970년부터 1989년까지의 유가 변동 추이에서 나타나듯이 1974년과 1981년에 유가가 폭등하면서 GCC 산유국은 막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출처: Earth Policy Institute from U.S. Department of Energy (DOE),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그림 1] 명목 유가 변동 추이(US dollar, 1970년~1989년)¹⁾

GCC 지역의 산유국은 1970년 대 발생했던 두 차례의 석유 파동 시기에, 원유 증산을 위한 인프라를 단기적으로 확충할 목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였다. 이는 산유국이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으며, 당시 우리나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등지로 이주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GCC의 6개 국가(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공통적으로 해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해당 시기의 고유가는 GCC 산유국이 막대한 재정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GCC 산유국은 사회 및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1982년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재정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고 1986년에 들어서면서 유가가 약 50% 감소하면서 GCC 산유국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고유가 시대가 끝나고 현재 GCC 산유국이 저유가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GCC 산유국은 2014년 중반까지 고유가(高油價)의 수혜를 받으며 확보한 오일머니를 통하여, 산업 다각화를 위한 다수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진행해왔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GCC 지역의 산유국 중 대부분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고, 이에 따라 이주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액수는 프로젝트의 규모 및 수가 증가함

1) 1970년~1973년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유가, 1974년~1985년 유가는 정제회사의 원유 수입가격, 1986년~1989년 유가는 서부텍사스유 현물가격임.

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해외 송금 규모는 2014년 7.7% 증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World Bank 2015). 이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중동 산유국이 산업 다각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대거 발주하였고, 해외로부터의 노동력이 급속히 유입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F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조사에 따르면, GCC 국가 내 이주 노동자의 수는 약 2,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약 90%가 이주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IFO 2015).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약 900만 명(민간 부문 노동력의 89%), UAE 780만 명(UAE 전체 인구의 약 84.7%), 쿠웨이트 150만 명(민간 부문 노동력의 93%), 카타르 115만 명(카타르 전체 인구의 약 94%)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GCC 지역 산유국 내에서 차지하는 노동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FO 2015).

GCC 산유국에서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원유 수출을 통하여 대부분의 투자 자금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에 따라 GCC 산유국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유가의 변동과 더불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규모 및 발주 수의 변동은 노동력이 부족한 GCC 산유국 내에서의 해외 이주 노동자의 수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액수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의 여파로 인하여, 산유국으로부터의 신규 프로젝트 발주 물량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2015년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해외 송금 규모는 1.1% 상승하는데 그쳤다(World Bank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가 변동과 GCC 산유국 내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액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유가 변동에 따른 해외 송금액의 변화가 GCC 지역의 산유국 및 주변국의 신고립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가능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유가의 등락만으로 GCC 산유국의 재정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현재 산업 다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전체 GDP에서 원유 수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GCC 산유국의 경우 유가의 등락만으로 GCC 산유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앞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GCC 산유국들은 고유가 시기에 비축해 놓은 재정을 통하여 국가 기반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경우(전력, 천연가스전 개발 및 관련 시설, 의료, 교육 인프라 건설) 발주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가 변동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며, 부문별 이주 노동자 수의 증감 또는 송금액의 증감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 보인다. 그리고 해외 송금의 변동성을 분석하는 것은 GCC 지역 산유국 정부가 유가의 변동에 따라 경제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GCC 산유국이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자 산업 다각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GCC 산유국에서 석유는 경제 성장에 중요한 자금원이자 동력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석유 수출을 통하여 GCC 산유국은 자본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저유가가 GCC 산유국의 경제에 즉각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3. 선행 연구

해외 송금 분야와 관련하여서 조정환, 김대중은 인도를 사례로 들어 해외 자본 유입과 GDP 간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논문에서 저자는 외국인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해외근로자송금의 세 가지 자본 유입과 GDP와의 장, 단기 Granger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세 가지 형태의 자본이 GDP와 장기 균형 관계에 있는 것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수출하는 인도의 경우 해외근로자로부터의 송금은 인도의 GDP와 어떠한 인과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한 바 있다.

조정환, 김태환은 부패 수준과 해외 송금의 상관성 연구에서 154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부패 수준이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부패 수준 외에도, 소득 수준과 금융 시장 발전 정도는 해외 근로자 송금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송금 유입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을수록 송금 유입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김판석은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송금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액은 거시적 차원으로 보았을 때 송금 소득이 방글라데시의 산업 발전을 위한 재화, 원자재 수입, 환율 안정, 국민 저축, 부채 지불 등에 기여한 것을 입증하였으며, 미시적으로는 가구들이 다양한 형태의 소비를 송금액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마지드 타가비(Majid Taghavi)는 “The Impact of Workers’ Remittances on Macro Indicators”에서 해외송금이 GCC 국가들의 거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해외 송금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펀딩 수단이며, 경제 이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오는 수익은 이와 관련된 모든 산업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실질 GDP, 자금공급, 실질 이자율, 실질환율,

실질 해외송금과 같은 거시 지표를 기초로 GCC 6개 국가의 현황을 time-series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엘-삭카(El-Sakka, 1999)는 이주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이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나팔(Naufal)과 테르모스(Termos)는 해외 송금의 결정 변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과 같이 국내에서는 주로 노동자를 수출하고 임금을 받는 국가의 사례를 위주로 해외 송금의 영향력에 대하여 연구가 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GCC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거시적 지표를 활용한 해외 송금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시기적으로 적정 유가 또는 고유가에 힘입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었던 시기에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유가 시기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판단된다.

유가와 관련한 분석은 국가 경제 상황과 유가의 등락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Pierce와 Enzler (1974), Rache와 Tatom (1977) 등이 수행한 연구를 이에 대한 예로 들 수 있다. 이 후 Gisser와 Goodwin (1984), Hickman, Huntington, Sweeney (1987) 등은 미국에서 유가 변동과 거시 지표 간에 역의 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였다. 키렌 아지즈 차우디리(Kiren Aziz Chaudhry)는 해외 송금과 석유 경제가 미치는 영향력을 민간 및 국가의 관점에서 연구한 바 있다(1989). 또한, 무함마드 알-하디 아로리(Mohamed El Hedi Arouri)와 줄리엔 포큐(Julien Fouquau)는(2009) GCC 국가에서 단기 유가 변동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문배(2001)가 원유시장 전망과 유가변동의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에서 유가 변동의 거시경제분석 모형, 투입산출 모형을 정립하였으며, 김중관(2015)은 석유시장 구조의 국제정치역학 연계성에서 최근 유가 변동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가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유가 변동에 따른 국가 내 거시 지표 및 주식 시장의 변동과 관련한 연구 주제가 많았으며, 유가 변동의 원인을 찾는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유가 변동에 따른 파급효과로 GCC 국가보다는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여러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가와 해외 송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GCC 산유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 및 모델을 구축하고, 걸프 국가의 신고립주의 정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4. 연구 방법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유가와 이주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량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본 논문에서는 상정한다.

H_0 : 이주 노동자의 해외 송금액 규모는 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H_1 : 이주 노동자의 해외 송금액 규모는 유가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가설을 상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고 자 한다. 유가가 상승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건설 및 프로젝트의 증가로 이주 노동자들이 해외 로부터 유입될 것이며, 따라서 해외 송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 다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석유 생산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수입하는 국가의 GDP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정부 지출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정부 지출의 경우 GCC 산유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수입의 대부분이 정부 지출 계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도 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R_{ct} = \beta_0 + \beta_1(OP_{ct}) + \varepsilon_{ct}$$

위의 도식에서 R은 해외송금액, OP는 유가를 나타내며 c는 국가, t는 연도를 각각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목표는 유가와 해외송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β_1 값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통하여 유가가 이주 노동자의 해외 송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신고립주의 정도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유가의 변동에 따른 이주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액 데이터는 Arab Monetary Fund에서 2015년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2004 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유가의 경우 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연평균 basket price를 활용하였다.

5. GCC 산유국 내 이주 노동자 현황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GCC 산유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조 인하여 해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GCC 산유국 중에서도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 해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로부터 GCC 산유국으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은 GCC 지역으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보내고 있는 국가이며, 필리핀은 약 79만 명, 인도 약 72만 명, 파키스탄 약 61만 명이 GCC 산유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ILO 2015, 7).

[표 1] GCC 주요 산유국별 해외 이주노동자 수(단위: 명)

국가명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합계
필리핀	75,286	104,622	330,040	259,546	769,494
인도	55,868	63,096	357,503	141,138	617,605
파키스탄	44,229	8,119	270,502	273,234	596,084
합계	175,383	175,837	958,045	673,918	1,983,183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CC 산유국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GCC 네 개의 주요 산유국의 총 해외 이주 노동자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GCC 전체에는 약 300만 명의 해외 이주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은 건설 부문에 각각 582,445명(카타르 내 전체 해외 이주 노동자의 46.3%)과 1,591,523명(사우디아라비아 내 전체 해외 노동자의 26%)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산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쿠웨이트의 해외 노동자는 160,013명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쿠웨이트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전체 산업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산업 다각화 정책과 국제 행사 등을 유치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자국 내 수요가 증가한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네 국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중장기로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한 국가 기반 건설에 대한 투자는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건설 부문에 대한

노동력은 특히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부문 보다는 단순 노무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부문에 대한 노동력 수급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GCC 산유국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율이 높은 만큼 저유가로 인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감소는 이주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외 이주 노동자의 수의 감소는 GCC 지역의 산유국 내에서의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의 수와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정부의 재정 상태 및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6. 유가에 따른 해외 이주 노동자 송금액 변화량 분석

앞서 제기한 해외 이주 노동자 송금액과 유가 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우디아라비아

회귀분석 통계량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810998
결정계수	0.657718
조정된 결정계수	0.614933
표준 오차	4516.556
관측수	10

분산 분석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1	3.14E+08	3.14E+08	15.37257	0.004414
잔차	8	1.63E+08	20399275		
계	9	4.77E+08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상위 95.0%
Y 절편(해외송금)	4567.761	4704.425	0.97095	0.36001	-6280.66	15416.18	-6280.66	15416.18
X 1(유가)	227.4743	58.01751	3.920787	0.004414	93.68571	361.2629	93.68571	361.2629

쿠웨이트

회귀분석 통계량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863214
결정계수	0.745139
조정된 결정계수	0.713282
표준 오차	2701,564
관측수	10

분산 분석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1	1.71E+08	1.71E+08	23,38968	0,001294
잔차	8	58387576	7298447		
계	9	2,29E+08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상위 95.0%
Y 절편(해외송금)	-3427,46	2813,937	-1,21803	0,257914	-9916,41	3061,489	-9916,41	3061,489
X 1(유가)	167,8337	34,703	4,836288	0,001294	87,80842	247,8589	87,80842	247,8589

카타르

회귀분석 통계량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865178
결정계수	0.748534
조정된 결정계수	0.7171
표준 오차	1852,045
관측수	10

분산 분석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1	81681744	81681744	23,81342	0,001225
잔차	8	27440580	3430073		
계	9	1,09E+08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상위 95.0%
Y 절편(해외송금)	-2597,6	1929,083	-1,34655	0,21503	-7046,07	1850,874	-7046,07	1850,874
X 1(유가)	116,0952	23,79049	4,879899	0,001225	61,23422	170,9562	61,23422	170,9562

아랍에미리트

회귀분석 통계량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869209
결정계수	0.755524
조정된 결정계수	0.714778
표준 오차	1354.042
관측수	8

분산 분석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1	33996038	33996038	18.54231	0.005059
잔차	6	11000581	1833430		
계	7	44996620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상위 95.0%
Y 절편(해외송금)	1620.929	1614.237	1.004146	0.354071	-2328.97	5570.823	-2328.97	5570.823
X 1(유가)	95.29773	22.13098	4.306079	0.005059	41.14518	149.4503	41.14518	149.4503

분석 결과 95% 신뢰 수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는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액과 유가 간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서로 양(positive)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P-값이 0.005059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즉 유가가 상승할수록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저유가 상황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액이 줄어들고 이는 해외 이주 노동자의 수가 줄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유가와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액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GCC 주요 산유국 중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는 두 변수 간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유가의 변동에 따라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액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며, 베타1의 계수를 파악한 결과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 유가가 증가할 때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액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유가 이외에도 GCC 산

유국의 경제 상황, 정부 정책 등과 같은 변수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변수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걸프 지역 내에서 현재 저유가로 인한 자국민 우대 정책 강화와 해외 노동력 의존율 감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계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저유가가 걸프 지역 내 신고립주의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과 같은 세계적인 신고립주의 추세는 걸프 국가의 정부가 자국민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강동관, 이해춘, 이규용(2011).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양, IOM 이민 정책연구원.
- 김영덕(2003). “유가변동에 대한 거시경제의 반응: 도입단가와 국제현물유가의 차이를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 제2권, 제2호, 1-30.
- 김중관(2015). “석유시장 구조의 국제정치역학 연계성: 2015년 유가변동의 요인 분석”, 『중동 연구』 제34권 제1호, 1-22.
- 김관석(2015).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송금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아시아연구』 18권 1호, 1-32.
- 이문배(2001). 『원유시장 전망과 유가변동의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의왕, 범신사.
- 조정환, 김대중(2011). “해외 자본 유입과 GDP 간 인과관계 분석: 인도를 중심으로”, 『금융지식연구』 9권 3호, 29-50.
- 조정환, 김태환(2013). “부패 수준과 해외 송금의 상관성 연구”, 『경제학연구』 61집 2호, 145-168.
- Abusaaq, H., A. Alfi, P. Khandelwal, K. Miyajima, and B. Piven (2015). “Countercyclical Macroprudential Policies in Saudi Arabia,”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Akira Shimada (2010). “The Transfer of the Remittance Fee from the Migrant to the Household”,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 25, no 3, 613-625.
- Arab Monetary Fund. Arab Monetary Fund Online Database www.amf.org.ae
- Chami, R. et al. (2005) Are immigrant remittance flows a source of capital for development? *IMF Working Paper*, 52(1), 55-81.
- Cohen, J.H. and Rodriguez, L. (2005). “Remittance outcomes in rural Oaxaca: Mexican challenges, opinions and opportunities for migrant household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1(1), 49-63.
- El-Sakka, M and McNabb, R. (1999). “The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migrant remittances”, *World Development*, 27, 1493-1502.
- Hend al-Sheikh (2014). “Arab Gulf Labour Markets and Migration: Challenges, Data,

- Policies”, *Middle East Studies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Washington.
- Mohamed El Hedi Arouri, Julien Fouquau (2009). “On the short-term influence of oil price changes on stock markets in GCC countries: linear and nonlinear analyses”, *Quantitative Finance*.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2015). “Statistics on Labor Migration within the Asia-Pacific Regi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Manila, Philippine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5). “Labour Market Trends Analysis and Labour Migration from South Asia to Gulf Cooperation Council Countries, India and Malaysi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Nepal.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5). “*Annual Meeting of Ministers of Finance and Central Bank Governor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oha, 1–30.
- Osili, U. O. (2007). Remittances and savings from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and evidence using a matched sampl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3, 446–465.
- Ratha, D. (2003). Workers remittances: an important and stable source of external finance. In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Striving for Stability in Development Finance*. World Bank: Washington
- Sayan, S. (2004). “Guest workers remittances and output fluctuations in host and home countries”,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40(6), 68–81.
- Supriyo De, Saad Quayyum, Kirsten Schuettler, and Seyed Reza Yousefi (2015). “How the Oil Price Decline Might Affect Remittances from GC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3.
- The Economist (2009). “The GCC in 2020 Outlook for the Gulf and the Global Econom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ondon.

문선명 선생의 이상사회론과 세계공동체 비전: 국경철폐와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안연희 (선문대)

목 차

1. 문제제기
2. 종교와 이상사회
 - 1) 종교와 유토피아
 - 2) 정치와 종교, 이상사회론
3. 문선명 선생의 평화이상세계론과 세계공동체의 비전
 - 1) 문선명 선생의 평화이상세계
 - 2) 지구촌시대, 세계공동체의 실험과 위기
 - 3) 문선명 선생의 세계공동체 비전과 그 의미
4. 맺음말

I. 문제제기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전 세계가 가깝게 만나고 있는 시대는 없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확산, 인터넷, 사회통신망서비스 등을 통해 지구촌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 균질화되고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류가 시공의 제약을 넘어 소통할 수 있게 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혁명적 변화는 세계가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조성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시작하여 다른 지역까지 다문화사회화가 심화되면서 민족, 인종, 문화, 계급, 성차, 소수자 차별 등과 관련된 사회, 정치, 문화적 난제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세계화 담론의 부상 초기부터 세계화¹⁾ 과정은 역으로 생존과 정체성의 단위로서 민족,

국가,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자극하면서 세계화의 흐름과 지역화가 서로 길항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점차 글러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²⁾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이후 세계화의 보편주의적 흐름과 지역문화의 상대성과 다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적합한 세계화 모델이자 나아가 세계공동체의 가능한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³⁾ 지역문화의 상대성과 고유한 가치조차 세계화 시장에서의 상품성이라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재규정된 개념이지만, 적어도 이후 글로컬라이제이션 담론은 서구 제국주의로서의 세계화가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살아있는 어떤 세계공동체의 이상을 상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과연 21세기 세계는 그러한 이상대로 세계화의 흐름과 지역정체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양성을 가진 하나의 지구촌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자원고갈, 기후 및 식량위기, 핵무기와 전쟁위협, 상존, 신자유주의의 결과 전 세계의 경제양극화, 환경파괴, 세대갈등, 민족, 종교 갈등 등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세계 곳곳의 재난, 분쟁, 갈등의 위기상황은 금세기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중재하고 조율하며 연대를 모색하는 성숙한 세계시민사회나 국제기구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자국중심주의나 강대국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여전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세계공동체라는 이상도 이러한 수많은 난제와 냉혹한 현실주의의 도전과 목마 씨름 중이다.

그렇다면 사랑, 자유, 평등, 평화, 자비와 같은 고귀한 이상과 이타적 정신을 가르쳐왔던 종교는 그 대안이 되고 있는가? 지난 세기말부터 종교의 재귀환, 종교의 부활이 빈번히 운위될 정도로 최근 종교는 세계의 공적 영역에서 주요 이슈를 생산하며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테러를 일삼는 폭력에 동원되고 종교간 갈등을 부추기는 근본주의적 종교현상, 혹은 정치적 보복의 논리를 제공하는 부정적인 종교의 모습이었다. 이는 현대인의 종교에 대한

1) 롤런드 로버트슨은 세계화를 단지 월러스틴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체계로서 정의하거나, Meyer와 같이 정치 체계로 정의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양자를 포함하여 근대성을 파악하고자 한 19-20세기의 사회학 이론들과 세계화 이론을 연결시키며 세계화를 “전체로서 세계의 구체적 구조화”로 정의하고, 전지구적 조건과 전지구성을 강조한다. 롤런드 로버트슨, 『세계화 이론과 전지구적 문화』, 이정구 역, 한국문화사, 2013. Peter Beyer, *Religion and Globa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1994.

2) 세계화의 지역화를 결합한 혼성어인 glocalization은 본래 스타벅스, 맥도널드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성공적 마케팅을 위한 경영전략으로서 제품의 현지화, 지역화(사고는 글로벌하게, 행동은 지역적으로)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으나, 세계화이론을 펼친 사회학자 로버트슨이 1997년 “세계화와 토착문화”에 대한 학회에서 glocalization을 보편화경향과 특수화 경향의 동시성-혹은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세계화이론을 지역의 다원성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회과학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 Roland Robertson, '

무관심, 더 나아가 종교에 대한 우려와 혐오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는 인류애와 국제적 대의를 두고 상호 공존의 지혜를 함께 모으기보다는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바, 세계공동체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만하다.

냉전 종식 후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경찰이자 평화 수호국을 자임해왔던 미국은 지난해 트럼프시대를 선택하면서 미국중심주의, 신보수주의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해 유럽의 심장인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브렉시트(Brexit)와 함께 세계화 추세로부터 전환하는 또 다른 세계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신고립주의 시대의 도래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러한 흐름은 신자유주의의 세계자본주의 경제체계가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블록 경제공동체와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역, 국가 체제의 저항이다. 통합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과 심화된 해당 사회의 다원성에 피로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외된 이들이 각국에서 자국민의 일자리와 경제를 먼저 보호하면서 고립적 자구책을 추구하는 입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소위 국제사회를 주도하던 국가들에서조차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자국중심적인 표어를 내세우는 극 보수 정치인들이 당선되거나 정권을 재창출하고 있다.

취업, 무역, 유학, 비즈니스, 관광 등으로 전 세계를 이동하는 세계인구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9.11참사와 이라크전쟁에서의 민간인학살, 관타나모 수용소⁴⁾의 반인권적 폭력, 2015년 파리테러, 연이은 아랍계 무장단체의 유럽 각지 테러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 테러조치의 폭력적 신원확인 절차, 아랍계와 유색인종에게 강화되고 있는 억류, 입국, 혹은 출국 금지조치 등은 인류가 전 세계적 전쟁 속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으며 쌓아온 평화와 관용과 연대의 지혜를 무색하게 하며, 인종, 민족, 국가, 문명, 종교 간의 갈등에 새로운 불을 지피고 더 큰 불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은 미시적으로는 다국적 학생들이 섞여있는 일상의 대학 강의실 기류에도 긴장이 감돌게 한다. 세계공동체의 위기는 저 멀리 있지 않으며 곧장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기류와 정서까지 변화시킨다. 다문화, 다국적 배경을

4) 관타나모수용소(Guantanamo Bay detention camp)는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쿠바 관타나모 만 해군 기지 안의 수용소인데, 2001년부터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와 아프가니스탄의 전 탈레반 정권에 연루된 테러용의자들을 수감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와 재판과 같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억류, 구금·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감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비인간적 폭력이 만연한 인권사각지대임이 알려지면서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산하기구인 유럽의회 등은 고문과 인권침해 등을 들며 수용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폐쇄하지는 못했지만, 수감인원을 축소하고 최대한 정상적인 재판절차를 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을 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의 폐쇄정책을 폐기하고 관타나모수용소를 테러용의자들의 수감소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관타나모 수용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등 참고

가지고 상호 대화와 이해, 관용의 필요성을 모색하던 학생들이 최근 들어 서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경계하거나 피해의식을 드러내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날을 세우는 편치 않은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취임 1개월 만에 이란·시리아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고 난민 프로그램도 일시 중단하게 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반 이민 행정명령 발효로 애꿎은 사람들까지 공항에 발이 묶이는 등 큰 혼란을 야기되었다.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면서 미국과 세계를 인종과 종교로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글로벌 기업을 통해 세계화를 주도하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었으며 패권을 장악해왔던 미국이 자국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처럼 반세계화의 장벽을 쌓기 시작하자,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입출국이 불안한 고립주의 국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⁵⁾ 트럼프의 이러한 반이민 정책이나 신기후체제⁶⁾의 의무 불이행선언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강대국으로서 세계 공통의 의제에 책임있는 역할에 대한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현상은 브렉시트가 보여준, 유럽의 실업, 저성장, 사회계급적, 문화적 갈등 등으로 반이민정서와 난민 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고 동북아시아에서 북한문제, 미중의 패권 다툼과 러시아, 일본 등의 보수정권의 강화 등과 조우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을 위한 각축과 전 세계 강대국들의 지역패권주의가 더욱 심화될 것을 예상하게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 간 분쟁과 갈등도 곳곳에서 더 첨예해질 것이다.

그런데 난민문제, 환경문제, 금융위기처럼 이미 상호연관과 의존성이 커진 지구촌 사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제는 이제 단지 그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신고립주의, 자국중심주의, 지역패권주의의 대두라는 세계공동체에 대한 도전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는 인류가 하나의 평화로운 지구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천적 지혜를 모으는 공동체 실험의 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연대와 세계공동체 모색에서 후퇴하여, 나와 너, 우리와 저들의 이분법을 통한 정체성의 수사학을 통해 집권하면서 각국의 자구책을 찾고자하는 최근의 흐름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와 집단이 일차적이고 본능적으로 자기보호와 생존의 전략, 자기

5) “트럼프의 ‘마이웨이’... 반이민 정책 ‘충격’·통상 전쟁 ‘공포’” 서울신문 2017년 2월 17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20014010&wlog_tag3=naver#csidxd08aff01e1b9ff38edf9e74b454fd99

6) 윤순진, “기후변화와 평화의 상관성과 종교의 역할”, 『평화와 종교』 2 (2016), 51-84.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적 성향의 표출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최근의 흐름이 과연 각국의 안정과 생존, 나아가 성장과 발전에 근본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이로운 것일까? 또한 인간에게 자기보호와 생존,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성향만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 상호의존성을 근원적으로 인식하고 공감과 소통, 관계를 지향하는 이타적 본성도 뿌리 깊지 않은가? 전 세계가 공통의 물리적 조건과 재화 및 통화의 교환체계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인류가 그러한 공감과 소통의 이타적 감각을 일깨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여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함께 번영하는 세계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비전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구촌사회의 난제와 위기는 공동 운명체로서 인류에게 제기된 새로운 물음의 상황이다. 국제연합의 활동이나 다양한 국제적 비영리기구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차원에서 세계여론을 형성하고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고 해법을 모색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한 기구들은 근대국가의 틀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총체적이고 초월적 비전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적 자원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정정치에 대한 우려와 경계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종교의 유토피아사상, 이상사회론은 단지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하는 피안적인 상상의 해법만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세계공동체의 가능성을 미리 예시해 왔기 때문이다.⁷⁾ 지금 여기의 현실에 대한 적합한 해답의 체계가 되지 않는 종교는 아마도 동시대 나아가 미래에 적합성과 지속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지금 세계가 처한 공동체의 위기에 적실성 있는 대안과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종교는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에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결코 지구촌시대, 세계인의 종교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세계평화가정연합의 창시자 문선명 선생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제에 종교계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해왔고, 각 종교가 세계평화를 위해 서로 연합하는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랐다.

따라서 본 발표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태어나 세계대전, 참화와 동서냉전의 시대를 겪어오면서 누구보다 평화를 염원했던 종교창시자이자 통일운동가, 평화운동가로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운 인류공동체 실현을 위해 힘써온 문선명 선생의 이상사회론이 현재 직면하고 있

7) 가라타니 고진, 『제국의 구조: 중심, 주변, 아 주변』,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2014, 52. 근대국가체계의 확장인 '제국주의'와 다민족사회의 관용, 공존의 모델인 '제국'을 구별하면서 제국주의를 지양하고 칸트가 말한 영원한 평화가 실현된 진정한 세계제국, 세계공화국으로의 전개를 주장하는 고진은 중세 유럽에서는 제국이 경제나 정치가 아니라, 보편종교, 즉 보편교회의 모습으로 먼저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는 세계공동체의 위기상황에 어떤 비전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종교와 이상사회

1. 종교와 유토피아

종교는 세계공동체에 절실한 인류애와 공감과 소통을 위한 이타적 본성을 일깨울 수 있는 자원뿐 아니라 불완전하고 난제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이상적 세계를 보고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이상사회론 혹은 유토피아적 비전도 가지고 있다.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utopia)란 불평등과 고통, 억압이 없는 이상사회를 그린 1516년 토머스 무어의 소설 제목에서 비롯된 개념이지만, 세속적 종교적 이상향, 이상사회의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유토피아(Utopia)는 그리스어 어원으로 어디에도 없는 곳을 의미하는 ‘ou(없는)+topos(장소)’로서의 의미와 좋은 곳을 의미하는 ‘eu(좋은)+ topos(장소)’라는 사뭇 다른 뜻을 동시에 지닌다.⁸⁾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에 방점을 두면 이상사회에 대한 상상을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한 공상의 산물로 비판하거나 가벼이 여기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어원인 ‘좋은 곳’으로서 유토피아는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요원하고 불가능해보이지만, 이상적 세상을 바라는 인간의 절실한 염원과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유토피아 사상 혹은 이상사회론은 해결되지 않는 인간 사회의 모순과 갈등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상적 사회에 대한 희망과 구상의 표현으로, 세속적인 유형과 종교적인 유형이 있다. 세속적인 유형의 이상사회론이 플라톤의 국가나 토마스 무어나 프란시스 베이컨의 유토피아, 마르크스의 공산국가처럼 철학적, 이성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의 조건과 상태를 구상한 것이라면, 종교적인 유형의 이상사회론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적인 혹은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이나 메시아나 구세주와 같은 존재의 도래, 깨달음과 같은 인간존재의 궁극적인 변혁을 전제로 하여 가능해지는 이상적 사회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⁹⁾ 종교적 전통이 그리는 이상

8) Garry W. Tropic, "Utopia", Lindsay Jones ed.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ition, vol.14, New York: Thomson Gale, 2005, 9491.

향은 잃어버린 먼 태고의 낙원, 즉 회고적 유토피아로 그려지기도 하나, 태고의 이상향을 다시 누리고 싶은 희망, 언젠가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신앙과 연결되므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회고적 유토피아는 도래할 미래의 이상향에 대한 열망과 결합될 수 있다. 한편 임박한 미래에 도래할 이상향에 대한 강한 종교적 비전이 특정한 시대 대중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변혁에 대한 열망과 결합하면 천년왕국운동과 같은 정치적이고 동시에 종교적인 사회변혁, 혁명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¹⁰⁾ 종교의 이상사회론은 불가능한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희망이나 상상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강렬한 신앙의 경험 안에서의 이미 선취하고 선언함으로써 폭발적 힘을 발휘하곤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교의 이상세계에는 신앙대중의 사회역사적 이해와 종교공동체의 이해가 동시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양자의 이해가 균형을 이룰 때 종교적 이상세계로서 대중에게 설득력을 가진다. 사회적 이해가 과도하게 반영된 이상세계는 종교적 영성이 부족하여 종교의 이상세계로는 자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면 종교집단의 이해만 반영한 종교의 이상세계는 사회현실과 유리된 비종교적인 이상세계의 표상으로 전락하기 쉽다.”¹¹⁾ 서구 종교개혁기 토마스 뮌저의 농민봉기 및 천년왕국운동이나 구한말 동학운동은 종교의 이상세계에 대한 비전이 그러한 현실의 열망과 부응하여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혁명적 에너지로 결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¹²⁾

21세기 지구촌 사회가 직면한 분쟁과 위협, 폭력 속에서 고통받은 이들의 현실은 그 자체로 여러 종교의 이상사회론은 적합성 여부가 드러나는 시험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 종교는 현실의 문제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로 여겨지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초래하는 한 위협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종교는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세계 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현의지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지금 세

9) 윤승용, 「한국종교의 이상세계론, 그 연구를 위한 시론」, 『신종교연구』 제29집 (2013)

10) 동양 종교의 이상사회론이 주로 순환적 시간관에 근거하여 회고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반면, 서구 조옥의 이상향은 주로 직선적 시간관에 근거하여 미래적, 종말론적 유토피아를 지향한다는 분석이 있다. 태고적 이상향이 미래의 이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식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역사를 순환적으로 이해하느냐, 직선적으로 이해하느냐의 차이는 존재한다. 예컨대 후천개벽적 이상세계에 대한 비전은 순환적 역사관의 테두리에서 이해되지만, 천년왕국적 이상향은 직선적 종말론적 역사관으로 이해해야 한다.

11) 윤승용, 위의 글.

12) 중세의 종교적 천년왕국운동은 사회주변부로 내몰린 채 불안하고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가지만, 자신들의 불만을 담아내거나 욕구를 표현할 수단을 정규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이 없는 민중들이 그러한 불만과 욕구를 표현할 수단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노만 콘, 『천년왕국운동사』, 김승환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신학연구소, 1993, 382.

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립과 반목, 그로 인한 고통의 양상은 단지 한 인종, 부족, 민족, 국가 단위에서만 문제적이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이 당한 고통은 단지 한국 소녀만의 고난이 아니며, 중국의 소녀, 베트남의 소녀, 일본의 소녀, 나아가 구조화된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여성의 처지와 연동한다. 남성들이 일으킨 제국주의 전쟁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식민 소녀들을 끌고 가 성적 도구가 삼은 그 구조와 논리는 스위치만 누르면, 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난다.¹³⁾ 그러한 연관성이 지금 세계 공동체의 위기의 구체적 모습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대한 의미있는 대안과 돌파구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종교가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희망의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생존과 번영의 논리에 지배되는 일종의 이익집단으로서 민족 혹은 국가와 같은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과 긴장을 초래하고, 민족, 국가, 문명 간 충돌을 부추기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면서 근대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초래한 동시대 종교의 왜소한 모습은 정교분리를 조건으로 종교자유의 권리를 할당받은 근대 종교의 입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근대 이후의 종교의 이상세계는 현실정치와 결별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상적인 종교 공동체 실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¹⁴⁾이 된 것이다.

종교가 한계를 가진 인간의 고통스런 현실에 대한 일정한 해답의 체계라면, 불안전하고 결여가 있는 현실문제가 해결된 이상적 구원의 상태, 나아가 이상사회에 대한 비전을 함축하게 된다. 그러나 종교를 해답의 체계로 만드는 물음의 상황도 해답의 체계도 정태적이지 않다. 새로운 물음의 상황은 새로운 해답의 체계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생명력있는 종교는 그러한 물음의 징후들을 현실의 사회보다 한 템포 더 빨리 인식하고 더 걸음 앞서 현실 사회에서는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는 자유와 구원의 세계를 제시하여 왔다. 이러한 종교의 비전은 때로는 내세나 완전한 피안의 세계로 표상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이상적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렬하고 생생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것은 불의하고 폭력적이며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 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상적 사회변혁의 청사진과 모델이 된다. 우리는 21세기 지구촌의 현실 속에서도 종교의 이상사회론이 가지는 그러한 잠재력의 의미있

13) 황현산, “소녀상과 만국의 소녀들”, 『한겨레신문』 2017년 3월 2일 칼럼.

14) 윤승용, 「한국종교의 이상세계론, 그 연구를 위한 시론」, 『신종교연구』 제29집 (2013), 58.

는 발현과 기여를 기대해보게 된다.

2. 정치와 종교, 이상사회론

지구촌 세계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막강한 변수, 혹은 강력한 의 사소통체계로 재인지 되고 있지만, 인류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약하다. 종교의 부활, 종교의 재귀환은 사회에서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회복되거나 확대되었다기보다는 뭔가 석연치 않는 현상,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힘으로서의 종교의 지속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국면에서 종교라는 강력한 잠재적 자원이 미래지향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계공동체의 손실이기도 하지만, 종교 자체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는 오히려 종교가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그로부터 나오는 정치적 상상력, 바꾸어 말하면 공동체적 상상력을 회복할 때 찾을 수 있을 않을까. 종교가 평화의 장애물¹⁵⁾로 여겨지는 상황은 단지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야 할 종교가 공적 영역, 공동체의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세계라는 인류의 새로운 공적 영역,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승용은 종교가 그리는 이상세계를 두 유형, 즉 천국과 극락과 같은 피안의 이상세계와 이 세상에서 현실의 결핍과 불완전성을 극복하여 이상적인 사회모델을 그리는 완전사회의 모습으로 구별해서 설명한 바 있다. 전자가 상당히 초월적이고 관념적이며 내세적인데 반해, 후자는 초월적인 것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삶의 현장과 인간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모델을 실험하고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교의 이상세계 추구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완전사회를 추구하고 상상하는 종교의 이상사회론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교는 단지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체계일 뿐 아니라, 전체로서의 인류 사회에 대해서도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내세적이고 초월적인 피안의 이상향에 대한 관념보다는 완전사회를 그리고 실험하는 종교의 이상사회 추구하고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완전사회를 지향하는 종교의 이상사회론에서 사회와 공동체의 전 영역에 대한 관심과 비전은 그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데 근대체제 속에서 종교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존속

15) Gerrie ter Haar and James J. Bustil, eds, "Bridge or Barrier: Religion," *Violence and Vision for Peace* (Leiden: Brill, 2005), 3-34.

하게 되면서 종교의 이상세계론은 다분히 종교공동체 내에서의 실현으로 축소되거나 피안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¹⁶⁾ 그것은 종교에 잠재된 인간학적으로 의미있는 공동체적 비전과 상상력의 축소 혹은 억제에 다름 아니다.

현존하는 사회질서가 안정적이고 대체로 정당하게 여겨질 경우에는 대부분 종교는 사회 안에서 이러한 상대적 입지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게 되나, 현존 질서가 불안하거나 위태롭고 폭압적으로 인지될 경우에는 완전사회적인 이상세계 추구가 강하게 대두될 계기가 된다. 따라서 구한말 등장한 한국의 민족종교와 신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완전사회적인 성격의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지상천국’적인 종교적 비전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유교의 대동사회, 불교의 용화세계, 신종교의 후천선경, 기독교의 천년왕국 등은 이러한 완전사회적인 이상세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상천국과 같은 이상세계상은 피안의 이상세계와 같이 어떤 점에서 이상적인 세계이지만, 지상의 실현가능성을 전제하는 이상세계이기 때문에 차안에서 이상사회의 모델 역할을 하며, 특히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현실사회에 대해 보다 긴박한 역동성을 보여주며, 시공의 개념을 가지고 현실사회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차안과 피안의 이중성을 가지며 두 세계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전사회적 성격의 종교적 이상세계론은 사회적 조건만 주어지면 먼 미래나 먼 과거에 있던 피안의 이상세계가 현실에 침입하여 현세를 완전사회로 탈바꿈하는 현실변혁의 청사진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⁷⁾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이든 유토피아의 상실은 인간의 현 상태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동력의 상실일 수 있다.¹⁸⁾

9.11테러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후 우후죽순처럼 극렬한 종교집단의 빈번한 테러는 테러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일상적인 삶의 현실로 만들면서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폭력 문제를 다시 환기시켰고, 종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인들이 종교와 폭력의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은 종교를 부분적으로만 긍정하는 방식과 완전히 부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종교가 원래 선한데 사악하게 변질되어 폭력의 위험성을 드러내게

16) 윤승용, 59.

17) 윤승용, 61.

18) 김도공, 「원불교 이상사회론의 의미와 해석 방향」, 『신종교연구』 30 (2014), 239-240은 종교의 이상사회론이 이데올로기화할 수 있으나, 그 근원적 힘은 유토피아적 전망에 있음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 대한 칼 만하임의 통찰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종교의 이상사회, 유토피아는 기존의 질서를 재생산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의 구조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힘으로서 불의한 현 상태의 현실을 초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자체가 원래 비합리적인 미신에 의지하는 대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폭력적이고 나쁘다고 보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입장은 다르나 둘 다 종교가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제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만은 공유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유럽의 종교갈등과 전쟁의 결과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있다.¹⁹⁾ 바로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고 공적인 영역에 개입할 경우 끔찍한 폭력이 드러나므로 종교를 사적인 영역에 묶어두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이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것은 종교의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근대국가가 나타났고 국가의 등장으로 유럽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서구 유럽의 ‘신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교회, 종교로부터 권력을 인수한 근대 국가의 정당화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사실은 과연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종교를 사적 영역에 할당 한 근대 국가체제의 성장 이후에 얼마나 폭력이 감소하였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양차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의 참사, 국가가 통제하는 핵무기의 위협 등의 현상이 보여주듯이 근대 국가 이후에는 이전보다 대규모의 살육과 체계적인 폭력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²⁰⁾

정치와 종교에 대한 서구적 틀은 종교가 가진 공동체적 함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비판적 함의까지도 억제하여 종교를 개인화, 사사화, 비정치화하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그러면서도 근대 국가는 권력과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지지와 힘을 이용해왔다. 근대국가에 의한 길들여진 순치된 종교는 그러한 근대 국가의 폭력과 한계를 비판할 종교의 근원적 힘을 상실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 종교는 보이지 않게 이미 ‘정치화’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res publica)의 문제로 정의한다면, 인간의 총체적 문제에 관여하는 종교는 공동체의 문제에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와 정치라는 주제는 종교란 무엇이며, 종교의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리고 현재 세계가 처한 상황은 오히려 종교가 가진 공동체적 상상력으로서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다. 근대 국가체제가 국제사회의 문제, 인류가 공동으로 처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²¹⁾

19) 마크 릴라, 『사산된 산종교는 왜 정치를 욕망하는가』, 마리 오 율김, 바다출판사, 2009, 14.

20) 이상의 내용은 장석만, 「9.11이후의 종교」, 이진구 편저,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지음,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들녘, 2016, 290-292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21) 가라타니 고진, 『제국의 구조: 중심, 주변, 아주변』,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2014, 229-233. 주권국가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 즉 상위에 있는 제국 내지 교회를 부정하는 곳에서 성립하므로 주권국가간의 전쟁상태는 불가피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주권국가라는 관념은 주권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면 침략을

현재 지구촌 사회는 점차 다종교,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어떤 특정 국가가 하나의 종교를 국교와 같은 위상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회, 정치적 제도의 수준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점차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이 가능하려면 그 종교 자체가 독립된 집단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완전히 사회 문화적 제도로 세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 상황에서 절실한 요청은 이상적 국가에 대한 모델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이상적 세계공동체의 모델과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의 이상사회론이 신앙을 가진 이들의 이상적 공동체의 염원으로 표출될 뿐 아니라, 현실 사회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 공동체의 표상으로서 적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양자가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종교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래동안 민족종교, 지역종교, 국가종교로서 발전해오면서 가졌던 표상과 이념의 많은 부분을 세계라는 표상, 혹은 더 나아가 우주라는 표상 속에서 재 위치화시키는 새로운 이상사회, 이상세계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종교는 하나의 제도로서의 종교공동체의 생존 문제, 특정한 국가나 민족의 이해관계에 관여해온 국가종교의 위상이라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는 종교와 정치의 긴장, 정교분리의 위협에 대한 견제를 넘어 종교가 향후 세계사적 의미에서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 종교가 상당한 정치사회적 대결의 국면에서 긴장과 갈등의 촉매제 혹은 이데올로기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은 장기적으로는 종교의 생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인간 실존의 절실한 문제에 대한 해답의 체계로서 종교의 생명력과 활력을 유지하는 세계화와 지역, 국가의 정체성이 길항하며 평화공존의 모델이 요청하고 있는 전 지구적 과제와 위기의 상황에 대해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고 평화적 세계상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선명 선생의 평화이상세계론은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계평화가 정연합의 창시자이기도 한 문선명 선생은 한 종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일생동안 제도로서의 종교를 넘어서 평화이상세계실현을 염원하고 외쳤던 분이다. 그의 이상사회론은 이상국가론이 아니라 평화이상세계론이며, 세계의 평화라는 이상을 위한 충분히 구체적인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받아도 된다는 것을 함축하며, 그러한 함의가 소위 근대 주권국가들의 세계침략, 식민지 지배와 같은 제국주의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근대국가체제에서 헤게모니를 가진 강대국의 패권주의이며 국가 이데올로기의 확장일 뿐, 근본적으로 국가들간의 관계를 조율할 어떤 상위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Ⅲ. 문선명 선생의 평화이상세계론과 세계공동체 비전

1. 문선명 선생의 평화이상세계론

문선명 선생의 평화사상의 근간은 문선명 선생의 경험 속에서 인간의 부모로서 계시된 신과 인간의 참사랑, 즉 신인애일체의 관계이다. 인간의 참된 존재의미와 이상적 상태는 그러한 관계로부터 이해되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평화사상은 평화의 근원으로서의 신에 대한 심오한 종교적 체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선생의 비전은 좁은 의미의 ‘종교’를 넘어선 경제, 문화예술, 언론, 정치 등 다방면의 활동이 보여주는 것처럼, 앞서 이야기한 서구 근대의 종교관을 넘어서 삶의 총체적 영역에 대한 해답과 구원의 체계로서의 종교적 이상을 지향한다. 문선명 선생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상적인 상태가 이 세상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지상천국, 천일국 이상, 평화이상세계에 대한 비전으로 표현되곤 했다.

그러한 평화이상세계는 신과 인간, 자연만물이 더불어 함께 참사랑으로 화하여 공존하는 창조본연의 이상의 회복이며 실현으로 이해되었다. 인간이 간절히 염원해온 평화의 온전한 실현은 그러한 이상적 상태를 회복하여, 진정한 평화가 인류사회 속에 안착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참된 평화가 이 세계 속에서 안착된 상태가 바로 문선명 선생이 그토록 부르짖은 평화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참된 평화를 이 세계 속에 안착하게 할 수 있는가? 선생은 인간이 언제나 평화를 원하고 추구해왔지만, 왜 그토록 평화가 정착하는 것이 어려운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 이유는 한마디로 진정한 평화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참된 평화의 수립은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며, 그것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몸의 평화가 회복되고 나아가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평화, 인간과 만물의 평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문선명 선생의 평화메시지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서의 실천적 삶의 궤적은 그가 개인의 몸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로부터 민족, 국가, 세계, 천주(하늘 땅,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통일체)의 평화로의 전개를 외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그 가운데 여기서는 특히 앞서 언급한 세계공동체의 위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평화세계에 대한 비전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의 비전이 항상 세계 단위의 이상, 더 나아가 더 확장된 단위

의 이상세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생의 세계공동체 이상과 관련하여 문선명 선생의 인류를 위한 평화메시지를 중심으로 그의 평화이상세계론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뚜렷하다.

첫째, 문선명 선생이 지향한 평화이상세계는 평화로운 한 민족 혹은 한 국가의 이상적 질서를 모델로 하고 있지 않다. 민족, 혹은 국가의 이상적 질서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그들, 자타의 이분법에 의한 정체성 만들기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틀에서의 평화인식은 외부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통해 내부의 통합과 질서를 확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이 생각한 평화체제의 모델은 몸 마음의 통일성을 회복한 이상적 개인이며 동시에 이상적 가정이다. 이 이상적 가정의 질서는 국가자타의 이분법과 구별짓기에 의해 형성된 질서가 아니라, 소통과 통일, 화합을 추구하는 사랑의 질서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이상적 개인, 이상적 가정을 국가와 국가, 세계, 천주의 평화이상세계의 모델이자 기틀로 보는 것은 국가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이상적 평화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는 시뮬 관념적이라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그 모델의 근원적 이상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수 있는 보편적 평화의 문법으로서 오�히려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개인과 가정이라는 정의적 단위에서의 사랑을 매개로 한 호혜적 교환이 어떻게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세계시민주의라는 고차원적 범위에서 소아적 가족이 아니라 인류대가족의 호혜적 관계로 실현되고 회복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문선명 선생은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족’(One Family under God)이라는 세계표상을 통해 국가라는 단위를 뛰어넘어 그러한 인류의 호혜적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그러한 표어를 통해 문선명 선생이 지향한 평화이상세계는 국경선을 만들고 장벽을 쌓은 근대 민족 국가의 이념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그는 국경선을 긋고 장벽을 쌓는 것은 선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전략이고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국가간 장벽을 넘어선 교차교체축복결혼, 국제평화고속도로, 국경선 철폐운동 등을 통해 국가가 마련한 장벽과 전선을 사랑으로 넘어서고 해체하고 평화의 다리를 만드는 등 담을 허물고 길을 내는 실천적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많은 세계인들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가정연합, 세계평화종교연합 등 국제적인 다양한 평화운동기구와 단체도 그러한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 문선명 선생은 국가적 이익을 넘어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일종의 국제연합과 같은 기구

가 세계공동체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주장한다. 그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합(UN)을 이러한 세계평화의 모델적 기구로서 중요한 섭리적 의미를 가진 기구로 인식하였다.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문선명 선생이 흥남감옥에서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개인사적 경험이 유엔에 대한 이 특별한 인식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²²⁾ 그러나 선생이 특히 주목한 것은 약소국들까지 평등한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인류평화를 증진하고자 한 유엔 창설의 영구평화구축에의 비전과 세계 평화수호를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한 노력 안에서 선생은 신적 평화의 지상적 실현의 모델을 발견했던 것이다.²³⁾ 또한 이후 그는 유엔의 활동이 결국 강대국의 이해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아벨유엔으로 상원의 성격을 가지는 종교유엔을 제안함으로써 평화유엔을 창설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문선명 선생의 평화이상세계론은 신인관계와 이상가정을 모델로 한 평화가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확장되고 자연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평화세계에 대한 비전이다. 그러한 평화세계는 국경선과 각종 장벽에 의해 구획된 국가라는 틀과 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세계가 선(善을) 지향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왕래하는 ‘하나의 세계’로 그려진다. 국경선에 평화의 중립지대를 만들고 전쟁을 위한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만들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과 초종교적 연합체가 기존의 정치적 유엔의 한계와 기능을 보완하고 지고한 상위의 이념을 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은 평화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구체적 청사진이기도 하다.

2. 지구촌시대, 세계공동체의 실험과 위기

지난 세기 수천만의 생명을 앗아간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세계는 그와 같은 파괴적 전쟁을 억제하는 세계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각국의 연합기구로서 국제연맹, 국제연합(UN)을 창설하였으며, 인류의 평화공존을 위한 갈등중재와 인권증진, 인류문화의 보호 등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추구해왔다. 국제관계는 일국의 체제와 달리 강력한 제재와 강제적 구속력이 약하기에, 이러한 기구가 국제여론을 형성하거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22) Michael L. Mickler, "Toward an 'Abel UN?: The Unification Movement and the United Nations,"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 vol. 9, 2008, 49.

23) 유엔의 창설이념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종교적 천년왕국사상을 천년왕국사상으로 새롭게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유엔에 대한 선생의 관심에는 기독교적 지상천국사상이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일정한 상호견제의 역할을 담당해왔던 것이다.

최근 전 세계의 상호의존성과 소통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블록별로 부분적인 국가연합공동체의 시도가 등장하였고, 세계공동체의 윤리와 실효성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커져갔다. 유럽연합(EU)과 같이 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정치공동체로의 확대까지 시도하고 있는 일종의 통합의 시도들은 세계의 문제를 사유하는 지식인들에 의해 지구촌 시대의 새로운 보편주의에 대한 철학적, 실천윤리적 탐색을 고무하는 중요한 사례로 검토되고 있다.²⁴⁾ 특히 유럽통합을 위한 시도는 미국의 경제적 패권과 신흥아시아 강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지역적 연대를 위해 출현했지만, 그러한 경험은 근대 국가의 수립을 전후하여 오랫동안 서로 원수가 된 유럽 각국이 진정한 공존과 화해를 추구할 수 있다는 비전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태평양경제공동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비록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가 만들어낸 경제적 세계공동체로서 출현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국경과 통화의 장벽을 넘어 서로 왕래하고 문화적 자원을 공유하면서 확장된 경험은 인류에게 세계시민적 의식을 싹트게 하고 평화로운 공존과 연대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유럽 지식인 사이에 보편주의가 다시금 새로운 지적 화두가 되고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과 같은 이슈가 철학적, 정치사상적 초점을 형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원한을 가진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인들도 동아시아적인 경험과 가치에 대한 공통의 모색을 통해 미래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기반을 찾을 수 있다. 그러한 경향은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배제하는 획일적 문화가 아니라, 다양성이 그 자체로 존재의미를 가지며 공존할 수 있는 세계상에 대한 탐구로서, 과거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강대국 이데올로기의 수사였던 보편주의, 서구화에 다름 아닌 세계화를 극복한 진정한 세계주의, 보편주의에 대한 탐구로 향하는 길목이 될 것이다.

경제적 이해로부터 비롯하여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세계공동체의 실험들은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앞서 서론에 언급한 최근 구미 열강의 신고립주의, 자국중심주의 선언을 기점으로 심각한 타격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울리히 벡은 근대사회가 초래한 다양하고 파괴적이며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조된 위험들로 가득한 글로벌 위험사회가 개개인에게 주는 공통의 위기의식과 불안감이 역으로 성찰적 근대성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러한 개개인의 성찰적 의식으로부터 세계시민적 의식이 싹트고 세계시민사회가 형성

24) 알랭 바디우, 『사도 바울: 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 윤리를 찾아서』, 현성환 역, 새물결, 2008.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의 지적처럼 전 지구적 위기가 어찌면 의식있는 코스모폴리탄적 주체의 각성과 연대를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야 한다는 요청은 분명하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든 이후의 상황은 소위 글로벌 위험사회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가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은 가공할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양극화, 오랜 종교 민족적 분쟁, 무차별 무장테러, 각종 재난에 의해 대규모 난민 발생 등은 세계공동체에 크나큰 도전과 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유대 기독교와 무슬림 국가들간의 오랜 역사적 원한과 근대 이후의 정치경제적 이해의 충돌 속에서 서로를 선과 악으로 규정하여 벌이고 있는 테러와 응징과 보복의 폭력적 연쇄, 산업화가 초래한 지구온난화와 사막화로 인한 전 세계적 피해와 난민의 급증 등은 전 지구적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더욱 키지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의식과 불안감은 관용과 우정, 사랑과 연대의 윤리보다는 타자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격화시키며 더 큰 불안상황의 단초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²⁵⁾ 그런 상황에서 각국의 국제관계는 화해와 연대의 흐름에서 대치와 갈등, 강한 견제와 편 가르기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민법을 강화하고 이민자나 외국인들에 대한 신분증명요구와 몸수색 등이 강화되고 있으며, 소위 우리의 안전한 도시에 더 이상 어떤 불온한 자들의 출입의 막겠다는 물리적 장벽과 함께 심리적 문화적 장벽조차 강화되는 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의식있는 시민들이 그러한 보수적인 정책을 통해 집권의 대의를 얻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들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적 지성과 세계시민적 의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타자의 존재를 자신의 성찰과 완성을 위한 소중한 가치로 수용할 수 있고 경계를 넘어 사유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의 주체들의 깨어있는 활동이 절실한 때가 된 것이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문선명 선생의 평화메세지, 악의 수단이 된 국경선과 장벽을 허물고 평화의 길을 내고 다리를 놓자는 평화세계의 구체적 청사진들은 새로운 장벽들이 세계공동체에 중대한 도전으로 부각되는 있는 이때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은 특히 국경선 철폐, 경계선 철폐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문선명 선생의 평화사상이 세계공동체의 위기에 대해 대안적 비전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25) 장석만, 294.

3. 문선명 선생의 세계공동체 비전과 그 의미

1) 자타의 경계를 넘어: 이타적 양심의 각성을 통한 의식의 변혁

문선명 선생은 1987년 6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세계평화정상회의에서 세계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3단계 제시한 바 있다. 지구성의 참된 평화 실현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 상호간의 평화, 세계평화라는 3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는 신적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신 안에 있는 참사랑의 원천을 깨달아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된 온전한 존재가 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체의 완성이 인간 상호 간의 근본적 평화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조화와 통일을 이룬 사람은 타인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기 때문에 인류전체를 형제의 심정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선명 선생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사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긍정하는 데서 시작한다²⁶⁾고 본 것은 위하는 참사랑의 본체인 하나님의 실존을 긍정할 때 우리는 자기라는 틀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그를 나와 동등한 가치로 수용하며 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자타의 경계를 넘어서 타인의 가치를 수용하는 이타적 본성의 각성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인간 상호간의 평화라는 결과적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보는 것이다.

2) 원한의 경계를 넘어: 교차교체축복결혼을 통한 인류한가족운동

또한 선생은 국가 간 교차교체축복결혼을 통해 인류한가족운동을 펼침으로써 국가 간의 원한과 역사적 원한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참사랑으로 하나된 국제가정, 다문화축복가정을 통해 해소하여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문화의 배경, 전통의 배경, 인종의 차별이라든가 이런 모든 종교의 차별을 만들어 국경선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통일의 세계입니다. 즉 하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 세계는 국경이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라 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국경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²⁷⁾라는 평화메시지처럼, 국가적 민족적 원수와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화해시

26) 『평화경』 1347. “세계평화를 위한 도전과 가능성”, 1987년 6월 1일.

27) 『평화경』 1399-1400. “국경선 철폐와 세계평화”

킬 것이냐 하는 문제 앞에, 선생은 가정에서 원수 국가들의 남녀를 결혼을 통해 축복하고 그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될 때, 원한으로 점철된 심리적 국경이 점차 해소되리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한 제안은 인류의 국경선인 담은 인류의 타락으로 만들어졌기에, 이 경계선을 타파할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평화의 기원이요, 그러한 평화의 기원은 참된 가정에 있다는 근원적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세계평화를 가로막는 이기적인 담장과 경계선의 철폐는 총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될 수 있는 참된 가정의 심정문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문선명 선생의 교차교체축복결혼은 그런 점에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 특히 원수 국가들 사이에 가로놓인 경계선을 해체하고 평화의 다리를 놓고자 한 것으로, 어떤 점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세계공동체의 구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문화의 자녀들은 복합적 정체성으로 인한 혼란과 각종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도 하나, 그들의 경험은 향후 단일한 정체성의 틀에 고정된 이들보다는 세계공동체를 선도하는 코스모폴리탄적 주체로서의 소중한 자산이요 잠재력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국제결혼을 통한 평화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3) 종교와 국가의 장벽을 넘어: 초종교초국가연합과 평화유엔

앞서 언급했듯이 또한 선생은 세계를 분할하고 분쟁으로 몰아넣는 각종 경계선을 없애는 데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지역과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서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차적인 가치로 각성된 터 위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인간의 배후 원동력은 이윤에 대한 욕구였으며, 이로써 인간의 잠재능력이 크게 발휘되어 거대한 세계발전과 선진 강대국을 이룩하였지만, 이제 세계는 이윤추구의 동기를 넘어서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타적 사랑이 국제관계 차원에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선진국들, 소위 강대국들이 그러한 대열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강대국들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목적 때문에 신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세계의 후진국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생의 인식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는 외딴 섬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없이 번영을 기대할 수 없는 때가 되었기에,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도 세계 국가들이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건설되어야 한다.²⁸⁾ 선생은 특히

28) 『평화경』 1346-1347.

국제연합이 그러한 새로운 국제적 문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하였고, 누누이 그러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엔의 역할의 현실적 한계와 근원적 한계를 직시하면서, 초종교연합, 아벨유엔을 결성하여 종교적 정체성과 차이를 넘어 종교지도자들의 평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국가적 틀을 넘어서 비전과 세계평화의 상위원리를 제시하는 범세계적 기구가 되기를 바랐다고 하겠다. 국제연합에 대한 인식과 초종교초국가연합, 평화유엔의 창설도 국가의 경계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 소통하는 지대로부터 세계평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일관된 선생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4) 담장을 허물고 평화의 길로: 국경철폐, 국제평화고속도로의 평화비전

1981년 문선명 선생은 서울에서 열린 제 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ICUS)에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창하고 국제 평화고속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구상도도 발표한 바 있다. 국제 평화고속도로는 지상분리대를 중심으로 각각 4차선으로 건설하되, 고속도로 양 측면을 따라 폭 1킬로미터를 국제중립지역으로 정해 국경을 초월하는 지역을 만들자는 구상이었다. 또한 인터체인지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두어 무비자 출입국제도를 도입하고 무기를 실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군대이동을 제한해 평화의 공도가 되도록 하자는 구체적 제안도 있었다.²⁹⁾ 하나의 세계, 세계의 일일생활권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문화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통로로서 국제평화고속도로라는 기획의 연장선에서 선생은 2005년에는 알래스카와 러시아 대륙 사이의 베링해협을 연결하는 평화의 다리 건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근대국가는 국경을 만들고 장벽을 쌓아 자국의 독립과 질서수호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며 서로 경쟁하는 근대 세계 체제를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 국가체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거나 도구화할 수 있으며, 어떤 국제공법의 직접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한 폐해는 참혹한 인간 파괴의 세계대전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국제사회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경제적 세계화의 물결, 기술의 물리적 조건으로 지구촌 사회가 형성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이나 의식의 전환, 세계공동체의 공유물이 될 수 있는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시대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예로부터 길이 막히면 문명이 쇠퇴하고 길이 뻗어가면 세계적인 문명이 꽃피었다. 로마제국의 문명의 기반은 유럽 끝에서 지중해 지역 전역에 뻗어있던 로마가도에 있었으

29) 『참부모경』, 974.

며, 중국문명의 확산도 길과 역참제도에 있었음을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문선명 선생이 제안한 국제평화고속도로에 대한 비전은 세계공동체에 대한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 비전이요 청사진이라 할 만하다.

V. 맺음말

문선명 선생은 “모든 이웃나라의 행복과 평화 없이 자국만의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반성하여 볼 때 국적을 초월한 인류에 없이 세계평화란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진정한 자국의 평화도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쟁탈과 반목 일변도인 자국만의 이익 추구에서 벗어나 범세계적인 새로운 가치관의 수립해야 할 때라도 외치곤 했다.³⁰⁾ 분단과 대결로 점철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는 양심과 도덕 가치가 숭상되는 화해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평화의 메시지였다. 종교사상가로서 그러한 인식은 후천시대, 천일국시대, 지상천국시대, 평화왕국시대로 표현되는 종교적 이상세계의 도래에 대한 선포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선생의 희망에 찬 선언과는 달리 여전히 세계의 평화는 요원하고 세계공동체의 위기는 새로운 국면에서 지구촌이 쌓아온 협력과 연대의 기억과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계의 상황은 하나의 이웃으로 가까워진 지구촌에서 모든 인류가 피부 색깔과 문화 배경을 넘어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이 분출되고 있지만, 선생의 말처럼 세계는 개개인의 자기 존립을 위해서도 원수를 상징할 수 없는 화합의 시대로 가도록 촉구하는 도도한 흐름 속에 있음³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화합과 평화의 지구촌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이다. 이 발표를 통해 현 세계공동체의 위기를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고립주의로, 선생의 비전을 분쟁의 지역을 평화의 중립지대로 만들고, 막힌 곳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 평화의 길을 만들라는 국경철폐의 평화비전을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평화의 길을 내고 다리를 놓자는 선생의 평화이상세계 비전은 이상적이지만 동시에 실천적

30) 『참부모경』, 974.

31) 평화경, 1355.

이고 현실적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에게 유익한 선한 의도와 노력과 행동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하나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본성적 염원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선생은 교차축복 결혼을 통해 국경과 국가 간 구원의 장벽을 넘고자 했으며, 종교평화운동을 통해 종교가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평화의 선봉이 되어야한다고, 즉 종교가 스스로를 버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종교가 산다고 역설하였다.

평화의 세계는 (우리의 본성의 자유를 가로막는) 답이 없는 것, 그리하여 평평하고 화하는 것이며, 또한 혼자 이를 수 없고 상하, 좌우 전부가 화해가지고 다 기쁠 수 있고 원만하며 입체성을 가지고 순환해야 된다는 그의 가르침³²⁾은 지금 세계공동체의 위기 상황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

32) 『문선명 선생의 평화사상』, 성화출판사, 2002, 12-13. (1976.3.14./ 1979.10.26.)



브렉시트로 본 걸프(Gulf)지역 노동시장과 유가와와의 상관관계 분석 논평

이원삼(선문대)

이 논문은 걸프 지역 내 해외 노동력과 유가 간의 상관관계와 저유가 상황에서의 해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여 걸프 지역의 신고립주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걸프 지역 내에서 현재 저유가로 인한 자국민 우대 정책 강화와 해외 노동력 의존율 감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계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저유가가 걸프 지역 내 신고립주의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노동시장과 유가와와의 상관관계는 김 교수님이 주로 논한 경제적인 면 외에도 정치 사회적인 면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렉시트 이전인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부터 자국 내 노동시장의 변화를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아랍권의 반정부 민주화 시위의 물결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확산될 것을 우려한 사우디 정부는 취업 기회증진 요구와 민주화 요구에 대응하여 두 차례의 대규모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사우디 정부는 2011년 2월 23일 360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발표한 후 3월에는 670억 달러 규모의 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한 각종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은 걸프국가 대부분이 유사했다.

특히 사우디정부는 실업난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대규모 실업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회의 불안요소가 된다는 것을 아랍의 봄 이후 사태에서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업률이 중동지역에서는 이라크에 이어 2번째로 높으며, 이는 정세불안 등이 보이는 튀니지,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을 상회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총 인구의 50%가 21세 미만이고 34세 이하 인구가 국민의 70%인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식 실업률은

12%이지만 실제로는 15~2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20~24세 청년 실업률은 40%에 이른다. 이 실업자 중 약 28%는 여성이며, 40%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적으로 부국이지만 낙후된 학교 교육체제가 민간 업체들이 요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대신 종교와 아랍어에 치중하고 있어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1994년 민간 업체의 자국민 고용을 쿼터를 의무화하는 사우디인화 계획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부문 전체 인력 중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은 불과 10%에 불과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05년에 자국민 의무고용비율을 75%로 높이는 등 산업인력 자국화(Saudization)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2.5%를 상회하고, 민간 부문 업체들은 아시아 내 다른 국가 근로자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사우디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강력한 고용정책인 니타카트(NITAQAT)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사우디인들의 의식개혁 없이는 민영 시장 확대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미래의 고용시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영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1990년대에 인구증가율은 조금 낮아졌으나 아직도 매년 2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여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으나 2000년도 초에 새로운 직장의 발생 수는 2만 건에 그쳤다.

사우디 고용시장을 민영화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서로 분열된 노동 시장이다. 그리고 이는 지대국가의 특징이다. 공공 부분은 일도 적으면서 더 많은 월급과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했지만 민영 부분에서는 더 적은 돈을 위해 서로 경쟁해야 했다.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공공 부문에서 종사하는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 부문에서 경쟁하기 힘든 사우디인들은 공공 부문에서 직장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직장을 구할 수 없다면 차라리 실업자로 있는 것이 적은 돈을 받고 민영 부문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우디의 가족 네트워크는 아직도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젊은 실업자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사우디인들이 비즈니스 쪽에서 직장을 구하려 한다고 해도 회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기 꺼려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적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국어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가장 기초적인 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공공 부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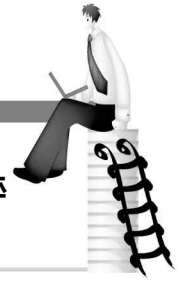
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주로 인문이나 사회 과학 등의 전공들 중 민영 부분에서 일을 구하기 힘든 전공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매우 높은 몇몇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 졸업생들을 고용하기 때문이며 또한 젊은이들은 취직을 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노력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집 안의 어른이나 친구를 통해 일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우디 국민 고용에 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뀌야 한다. 즉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부분의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의 실패는 “전통적인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민영시장의 확대의 걸림돌에는 교육의 문제도 있다. 기업이 고용하려고 해도 요구되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국민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이공계나 의약계, 경제계, 법학계 출신의 인재인데 사우디아라비아 학생의 대부분은 문학이나 역사 등 인문계를 선택 전공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대학의 2009년 졸업생의 41%가 인문계였다. 또한, 교과 과정의 60% 이상이 이슬람 관련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필요한 자리를 채워 왔는데 자국민의 전공분야를 생각하면 향후 자국민으로 대체할 경우, 인재를 충분히 얻는 것이 힘들다.

걸프 산유 국가들은 다른 중동의 어떤 나라들보다 빠른 변화를 겪었고 기존의 사회 균형이 사라진지 오래다. 걸프국가들은 기존에 겪어 보지 못한 극렬한 내부의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 구성이 변하고 부르주아가 성장했으며 친척과 부족 간의 끈이 약해지고 새롭게 도래한 계층과 전통적인 계층 간에 마찰이 생기고 있으며 언론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으며 정치 정당, 노조 등은 금지되어 있고 정부는 석유를 통해 얻는 막대한 돈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세력을 잠재우고 있다.

그러나 걸프국가들이 근대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50년 전부터이므로 40-50년 만에 지금의 걸프국가를 건설한 것은 매우 빠른 속도이며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그러므로 고용시장 분석에도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면도 거론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문선명 선생의 이상사회론과 세계공동체 비전」에 대한 論評

도현섭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이상사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비하여 역설적이게도 사회가 여러 위기에 직면하여 그에 속한 개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욱 많이 다루어지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문명의 발달은 인류로 하여금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에 따라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워진 만큼 서로 갈등하게 되는 상황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분열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인류가 겪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한 인류의 낙관적 전망이 완벽한 착오로 드러났을 때에도 이상사회에 대한 인류의 염원은 꺼지지 않은 채 오히려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다.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세계화가 그저 비현실적 명제가 아닌 실현 가능한 명제로 간주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인류가 세계공동체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었으나 이것이 한편으로 자국중심주의, 신고립주의 등을 배태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또 다시 인류는 전 세계적 차원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이상세계에 대한 담론이 허구적으로 비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세계질서나 보편윤리 대신 약육강식 혹은 적자생존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세계평화 혹은 인류공동체 등의 개념은 너무나 이상적, 추상적이어서 그 어떤 실질적 의미도 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으며, 이를 위해 종교가 인류에게 이상사회를 꿈꿀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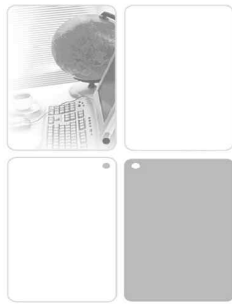
강조하였다. 일부 민족이나 국가에만 의미를 갖는 종교를 넘어 세계가 처한 공동체적 위기에 현실성 있는 대안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의 궁극적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저자는 문선명 선생의 이상사회론과 세계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오늘날의 인류와 세계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종교의 정체성이 인류에게 공헌하는 바를 언급하며 종교에서 이상사회에 대한 담론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진술하였으며, 한편으로 이상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가 정치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를 숙고하였다. 종교와 이상사회에 대한 저자의 탐구는 이후 이상사회에 대한 문선명 선생의 사상과 함께 세계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문선명 선생의 평화이상세계론의 특징을 평화의 모델로서의 이상적 개인 및 가정, 경계선의 철폐, 범세계적 기구 등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평화이상세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으로 분석하였고, 인류가 세계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 장애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전 세계적 위기를 진술하면서 국경선 철폐, 경계선 철폐 사상을 근간으로 한 문선명 선생의 세계공동체 비전이 그와 같은 위기의 대안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진단하였다. 특히 저자가 제시한 평화이상세계론의 특징이 각각 이상적 개인과 가정에 기초한 관용, 경계선 철폐에 의한 교류, 범세계적 기구를 통한 연대 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공동체로 나아가는 단계적 차원의 가치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제들에 대해 저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다. 먼저 이상세계에 대한 종교의 전망과 그에 따른 실천이 세계공동체의 가능성을 예시해왔다고 진술하였는 바, 종교가 갖고 있는 오류로 인해 종교가 그 이상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전에 실패해왔던 것이 역사가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상당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다음으로 종교와 정치가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았던 과거의 세계와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된 오늘날의 세계를 놓고 양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전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부연한다면 보다 설득력이 제고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논문의 부제로 언급하였듯이 국경철폐와 평화의 길이 세계공동체 건설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문선명 선생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국경철폐와 평화의 길 건설이 갖는 사상적 의의가 충분히 설명된 만큼, 한편으로 이것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현실성을 띠면서 구체적으로 전개된 바가 있는가를 부연

한다면 문선명 선생의 세계공동체 비전이 지닌 현실가능성이 보다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저자는 문선명 선생의 이상사회론이 이상국가의 정체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평화세계를 논하고자 하였다고 밝힌다. 이를 통해 이상사회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문제는 각각의 주체가 상정하는 이상사회가 얼마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과 같은 다원적 상황에서 각각의 주체가 제시하는 여러 이상사회상이 상이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사회를 제시하는 많은 이들이 문선명 선생의 태도와 같은 선상에 있다면 이상사회에 대한 담론이 더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분과 2_ 국제정치와 평화세계

발 표 전광호 (전북대)

Brexit and the Future Implications for Europe: Starting of the New Debate in Security Analysis

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파장과 우리의 시사점

토 론 오영달 (충남대)

고경민 (제주대)

Brexit and the Future Implications for Europe: Starting of the New Debate in Security Analysis

Kwang Ho Chu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ossibility of a Britain's exit (Brexit) from the EU became more imminent in 2007 when Article 50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was introduced. With an upsurge of the exit idea championed by political parties and advocacy groups in 2012, the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ruled out the immediate occurrence of a referendum but hinted that it would occur later to gauge public views.

An inquiry into possible outcomes of the Brexit reveals several uncertainties that face the UK as a country. Conversely, several countries both in Europe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re set to be affected by the decision. Brexit is expected to pose several long-term effect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European region shall accrue most of the envisioned security implications alongsid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has been a key partner of the UK and EU in addressing matters regarding global security.

This paper presents findings from a secondary research focusing on the Brexit and the future implications for European security with regard to the upsurge in global terrorism and boarder insecurity.

Key Words : Key Words: Brexit, UK, EU, CSDP, Security

I. Introduction

The European Union (EU), a politico-economic union of member states initiated in 1950, is an alliance that was formed out of an aim to bolster cooperation among nations following the devastating outcome of the World War II. Twenty three years after formation of the union, the United Kingdom, commenced its membership during the first wave of the EUexpansion. The UK's decision was driven by a need to participate in the union's internal single market so as to foster growth of its domestic

industries¹⁾. Despite the numerous benefits envisioned by and argued for by the country's leadership, there has always existed within the UK resistance to EU membership.

The possibility of a British exit (Brexit) from the EU became more imminent in 2007 when Article 50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was introduced. With an upsurge in support for the idea of exit being championed by political parties and advocacy groups in 2012, the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hinted that a referendum would occur to gauge public opinion. A referendum was held on the 23rd June 2016 where it attracted more than 30 million voters, a 71.8% turnout²⁾. The majority, 52%, of the population voted in support of the proposal to exit the EU while 48% voted to remain³⁾.

An inquiry into the possible outcomes of the Brexit reveals several uncertainties that face the UK as a state. Moreover, other countries both in Europe and around the world are set to be affected by the decision. Some of the immediate effects of the exit to the UK include a significant loss of value to the Pound Sterling, resignation of the Prime Minister and a hurried review of numerous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order to accommodate the change⁴⁾. Besides those short term effects that are already manifesting, the Brexit is expected to pose several long-term effect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European region shall accrue most of the envisioned security implications alongsid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has been a key partner of the UK and EU in addressing matters regarding global security. This paper presents findings from secondary research focusing on the Brexit and the future implications for European security with regards to an upsurge in global terrorism and

1) Kenealy, Daniel, John Peterson, and Richard Corbett. *The European Union: How Does it Work?*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2)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Brexit*. June 22, 2016. <http://soufangroup.com/tsg-intelbrief-the-security-implications-of-brexit/> (accessed June 30, 2016).

3)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Brexit*. June 22, 2016. <http://soufangroup.com/tsg-intelbrief-the-security-implications-of-brexit/> (accessed June 30, 2016).

4) Lee, Timothy B. *Brexit: the 7 most important arguments for Britain to leave the EU*. June 25, 2016. <http://www.vox.com/2016/6/22/11992106/brexit-arguments> (accessed June 29, 2016).

increased boarder insecurity.

This paper performs an analysis of he expected short-term implications of the Brexit before exploring more long-term and far reaching effects on regional security. Further, an in depth analysis of the expected role of the EU's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CSDP) and NATO in light of reduced regional political integration shall be presented. The paper shall draw conclusions about the likely futures of these institutions and about how EU security may shift in the light of the Brexit referendum.

II. Security Implications of Brexit

As the UK went to polls to make a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exit the European Union, the main focus for national leaders in relation to the predictable outcomes was predominantly anchored on the economic future⁵). According to Rordan (2016), pundits supporting each of the two sides of the debate created unsupported predictions and dishonest economic forecasts about the future of the country's economy. Surprisingly,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and institutions paid attention to the possible security ramifications of the Brexit that existed outside of immigration. However, like on the economic front, the UK's national boarder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strategies were also set to change. The major threats to the country's security in recent years have been terrorism and boarder insecurity emerging from non-terrori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sequently, the UK has relied on a strategy that primarily seeks to confront these threats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its people. Unfortunately in this regard, Brexit may result in the termination of many agreements with the EU on bolstering the UK's key pillars of national security.

5)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Brexit*, June 22, 2016. <http://soufangroup.com/tsg-intelbrief-the-security-implications-of-brexit/> (accessed June 30, 2016).

When the referendum was concluded in support of the Brexit, various opinion leaders gave new views on the expected implications while others affirmed their pre-referendum arguments. Top among the key concerns in the post-poll implications analyses is the matter of the stated key pillars of national security. The UK's then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had indicated that the decision to exit the EU would have adverse effects on the state's security. His argument mirrored most of the actual immediat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exit decision. Nevertheless, there exists some possibility for positive longer-term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Brexit as earlier reflected in many arguments by the pro-exit campaigners.

2-1. Revision of Security Policies and Excepted Short-term Security Implications

To begin with, it is imperative to underscore that the greatest security concern for the UK government is the rising threat of terrorism in the European region. Other forms of activities known to pose challenges to national security in the UK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include trafficking and other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s. The decision to leave the EU presents an initial challenge to UK security as a transition period that shall follow as the country adjusts into the new arrangement. The UK has continually evolved domestic security policies in reaction to the increasing threat of terror both in the UK and the entire European region.⁶⁾ The country maintained a national strategy used to counter all forms of activities believed to be a threat to the country's security before 1973, the year when its membership in the EU commenced. On joining the EU, the UK proceeded to change several of its security policies in order to have them agree with the union's requirements.

As a result of its membership in the union for more than four decades, the country has had most of its security legislations restructured in agreement with the EU's

6) Naidoo, Pranushka, *Should the UK leave the EU or consider an EEA relationship? A question of supremacy*. Manchester : GRIN Verlag, 2015.

legislative arm. One of the strongest arguments fronted by the pro-exit campaigners before the 23rd June 2016 centered on the issue of compromised sovereignty. The argument mainly focused on the EU security policies that require all countries to submit to certain regulations in order to enhance regional security⁷⁾. This was an area that proved largely contentious in terms of the extent to which the UK was justified to share sensitive security information with its partners in the EU.

Having left the union, the UK embarks on an unprecedented period of reviews on the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and strategies. The provisions that relied on the contributions and considerations of the EU security strategies need to be shelved paving way for another framework. The decision to leave the EU positions the country in a unique situation where the new leadership will need to construct a new strategy with which to achieve national growth⁸⁾.

The security strategies that have may have enabled the state to prevent major terrorist attacks are now to be revised. The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that campaigned for the Brexit continuously asserted that the UK is operating with a compromised capacity to secure its borders making it highly vulnerable to terrorist attacks while on the other hand the EU maintains that free movement among countries is a precondition for free trade. The recent attacks on Paris were the main point of reference that strengthened the argument that security was not assured with the UK's borders open to the EU. Evidently, a review shall have to be conducted on the country's new security strategy, creating a transition period of vulnerability to security threat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country's administration is yet to establish how each aspect shall be handled while outside the EU. The UK needs to effect changes in its key security intelligence agencies which include the Security Service/MI5,

7) Lee, Timothy B. *Brexit: the 7 most important arguments for Britain to leave the EU*. June 25, 2016. <http://www.vox.com/2016/6/22/11992106/brexit-arguments> (accessed June 29, 2016).

8) Lee, Timothy B. *Brexit: the 7 most important arguments for Britain to leave the EU*. June 25, 2016. <http://www.vox.com/2016/6/22/11992106/brexit-arguments> (accessed June 29, 2016).

National Crime Agency (NCA), National Ballistics Intelligence Service (NBIS), National Domestic Extremism and Disorder Intelligence Unit (NDEDIU),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NFIB), Secret Intelligence Service (SIS)/MI6 and the Defence Intelligence (DI)⁹⁾. It is during this period that the country will be exposed to numerous security threats emerging from terrorism and trafficking activities. Criminal opportunists in the region might have a chance to take advantage out of the approaching period to infiltrate the country and organize their activities.

2-2. Increased Security Threats due to Reduced Unity in Europe

In addition to the imminent adverse effects posed by the transition period, the UK's security also is challenged by the disunity between the state and other European nations. Ideally, an exit from the union involving numerous member states translates to a vote of no confidence on the benefits that a country can obtain from such a setting. The issue of a unified Europe was not a top consideration for Brexit voters. Therefore, it is evident that cooperation between the UK and other EU member states may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termination of its membership in the union.

Reduced corporation between regional partners further translates into reduced sharing of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security. Before Brexit, the UK would rely on the information shared in the EU's security meetings to strategize and create leads to better information on emerging trends in the international crime scene. UK's exit from the union reduces its chances of receiving important information that has been crucial in securing the country.

Equally, being a member of the EU, the UK stood to receive support from other EU member countries in instances where it was to fight international crime. Support would be in the form of financial aid or and other forms of material support as

9) Ottaway, Richard. *Foreign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UK and Scotland in the event of Scotland becoming an independent country: sixth report of session 2012-13, report, together with formal minutes, oral and written evidenc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13.

detailed in the EU constitution¹⁰⁾. However with the country's exit from the union, it is evident that the initial assurance of support in matters of security shall no longer be there. This would present the country's security with a handicap that it has not experienced as a member.

2–3. The Challenged Capacity of the United Kingdom' s Intelligence Agencies

Brexit affects the ability of the UK's security intelligence agencies to collect adequate information with which to act in order to ensure the British people of their security. While a member of the EU, the Secret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Defense Intelligence of the UK largely relied on information collected from global and regional partnerships¹¹⁾. Being a member of NATO and the EU, the UK has been strategically positioned to receive important information. The discussions regarding security made in the two organizations have been highly instrumental in providing vital security information to the intelligence personnel from the UK. With its termination of membership in the EU, it is evident that UK may lack vital intelligence information that has previously been core to enabling the securing of the lives and property of its people.

The challenge to intelligence agencies of accessing adequate information is also augmented by the transition period set to prevail before all institutions are structured accordingly to function outside the EU. Brexit equally introduces an aspect of mistrust between its administration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that remain under the EU. As a result of the UK's decision to exit the regional union, there is expected to be a quiet drift of the number of activities that involved UK and other EU nations. However, for

10) Wallace, Helen, Mark A. Pollack, and Alasdair R. Young. *Policy-making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11) Naidoo, Pranushka. *Should the UK leave the EU or consider an EEA relationship? A question of supremacy*. Manchester : GRIN Verlag, 2015.

the EU the contrary may be true, Laursen (2013) argues that member states that remain in the EU will be more comfortable trading and sharing information in the absence of the United Kingdom.

The envisioned reduced sharing of information shall translate into a lesser system of communication across Europe, a factor that enables security agencies to join together pieces of information shared by different states to predict imminent criminal activities. For instance, terrorist activities organized across different nations can easily be unearthed when security agencies in the involved countries share intelligence information. Initially, information given by one of the members in the EU compared by similar intelligence information emerging from another country would easily confirm impending terrorist activities prompting the threatened parti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¹²⁾. Therefore, with the British exiting the EU, it there is a risk for the EU that its intelligence agencies might lack crucial information for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union.

As a result of Brexit, the UK may potentially lose its position in contributing to matters regarding global security, a factor that has been instrumental in enhancing its own domestic and the European security. Since the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terrorist networks, the UK has been one of the global superpowers that have greatly contributed towards confronting the challenge. The fight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has continuously been staged by collaborations between regional partners. Agreements among global economic powerhouses have also been formed with the aim of confronting terrorism. While we may expect continued collaborations as a result of mutual interests it is likely that the UK's importance to such efforts has been diminished.

12) Tashev, Blagovest, and Professor Tom Lansford. *Old Europe, New Europe and the US: Renegotiating Transatlantic Security in the Post 9/11 Era*.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2013.

2–4. Reduced Instrumentality of the EU in Addressing Regional Security Matters

In the fight against this form of global insecurity, nations have been striving to make contributions both in the form of ideas and material support. The UK,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ve been among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ors to matters of enhancing global security¹³⁾.

In the recent past, the UK has been among the greatest contributors among European partners in stating the region's position with regards to the requisite actions to tackle global security challenges. This aspect has secured the state in a position where it easily addresses domestic security concerns as it raises them as regional matters. Equally, the positioning of the UK in the EU enabled the country to secure a strategic position in NATO where it has successfully promoted matters that combatted international criminal activities¹⁴⁾.

With UK's exit from the EU, its position as a main contributor towards global and regional security matters stands challenged. As David Cameron argued while attempting to convince his people to vote for the 'stay' option, the UK stands to lose its leadership position in the region and this extends to how the region will approach matters of security in the future. Previously, the UK's views would be channeled through the EU after which contributions from other member states would amplify/modify them further in order to make a concerted contribution in the debate on how global counterterrorism may best be tackled. Arguably, the presence and contribution of the UK in the Syrian crisis has been enabled by its influential position in the EU¹⁵⁾. The exit of UK from the EU presents an unprecedented consequence that

13) Oswald, Franz.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Emerging Security Partnership*.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15.

14) Kenealy, Daniel, John Peterson, and Richard Corbett. *The European Union: How Does it Work?*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15) Hallams, Ellen. *The United States and NATO since 9/11: The Transatlantic Alliance Renewed*. London: Routledge, 2009.

reduces the significance of the country's contributions towards matters of global security. The state's challenged importance in global security matters exposes its borders, as well as those of its neighbors in the EU, to terrorist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implications that befall UK directly, the European region shall also experience unfavorable repercussions. To begin with, it is imperative to recognize that indeed, the unity that has characterized European countries has been achieved largely through the EU instruments. The prevalence of unity among nations sharing geographical proximity is one of the factors that enable the preven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activities which thrive on disunity¹⁶⁾. The ability of countries to negotiate matters of mutual interest and draw sound conclusions has enabled the region to enjoy a period of security stability. The counterterrorism strategies that EU countries have maintained in order to protect their societies from the damaging effects of terrorist attacks have been mainly achieved due to the cooperation and goodwill between EU member states.

Unfortunately, the exit of UK from the union does not only affect its ability to share information with members of the EU but also affects the ability of the nations that remain to share information amongst them. There are several aspect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entire process that led to the achievement of Brexit which have dented the union's unity. At the outset, the argument of compromised sovereignty, argued for by pro-brexit campaigners, is an assertion that applies to all EU member states and if it was widely embraced the organization would collapse. Campaigners for the decision to leave the EU constantly reminded the British people that the sovereignty of their nation had been undermined by their membership in the EU. The campaigners presented a multifaceted argument that sought to play into the emotions of the public in order to influence the voting outcome. The success they achieved with the referendum in the UK shakes at the stability of the organization and raises questions regarding its sustainability.

16) John Baylis, Jon Roper.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eyond the Neo-Conservative Divide?* London: Routledge, 2007.

As the argument of ‘compromised sovereignty’ was extensively used as a key campaign item, other members of the union were closely watching. A close analysis presented by some of the pro-exit pundits indeed justified some extent of compromise on the sovereignty of the member states. Additionally, the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that campaigned for Brexit were keen on reminding the voters on how the country’s borders had been exposed to crime as a result of its membership in the EU. This is an argument that cuts across all the existing members of the EU that are committed to protecting their territorial borders from illegitimate immigrants, particularly with the contemporary challenges felt as a result of the Syrian refugee crisis.

With the idea of leaving the EU proving to be existential in many nations that form the EU, the identifiable ideas that were instrumental in influencing the voting pattern in the UK may spread or be invigorated in national discourses of some of the remaining member states¹⁷⁾. Consequently, an aspect of mistrust among nations may prevail due to a change in ideology arising from Brexit. Eventually, the unity that has prevailed among EU members stands to be challenged creating room for agents of international crime that may find opportunity in disunity.

In addition to the challenges on regional security caused by the reduced unity among the EU nations, the impending revision of agreements between the UK and EU shall also adversely affect the region’s security. Mainly, the EU’s agreement on security involves the modalities of sharing classified security information between member states¹⁸⁾. Despite most of the member states making up the EU being members of NATO, the EU has constructed its own framework on how nations should share vital and sensitive security information. The agreements have always remained independent from those of NATO and have largely proved to be instrumental in combating transnational criminal activities.¹⁹⁾

17) Lee, Timothy B. *Brexit: the 7 most important arguments for Britain to leave the EU*. June 25, 2016. <http://www.vox.com/2016/6/22/11992106/brexit-arguments> (accessed June 29, 2016).

18) Oswald, Franz.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Emerging Security Partnership*.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15.

Having been among the most powerful of the members of the union in terms of military capabilities and the economy, the UK played a key role in policy making. An example is Tony Blair's proposal to create a joint EU military force that remained under consideration until the Brexit decision was reached. Equally, the country's position enabled it to influence the decisions of smaller nations that relied on its guidance in seeking EU membership. It is therefore expected that as the UK terminates its membership by revocation of the various agreements, the region's security stability will be affected. Resolving those imminent challenges to security as the union revises security agreements will depend on the remaining members' ability to craft a sound strategy with which to face an unprecedented future.

While Brexit may be culminating into numerous adverse implications for the UK, there may too be opportunities. Most importantly, the country's security may benefit from reduced cross-border movement. As most of the pro-exit campaigners argued, the increased movement across borders that had been a result of the EU agreements was increasingly putting the country's security at risk²⁰). Easy movement into the UK would more easily result in the movement of terrorists or transnational criminals of other forms. The main argument backing this idea was that the recent European mainland attacks could have been avoided if the country's administration was keen enough to monitor movements into and out of the country. Therefore, in view of the increased cases of crimes orchestrated by people drawn from other nations, Brexit may be partly beneficial to the country in terms of security.

With the Brexit having been agreed upon, and an analysis of the resultant security implications relating to terror and cross-border insecurity in the UK and EU having been conducted, it is imperative to assess other global aspects that contribute to a secure UK and EU in the light of Brexit. The UK and other members of the EU rely

19) *Ibid.*

20) Riley-Smith, Ben. *Leave or Remain in the EU?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Brexit*. JUNE 20, 2016. <http://www.telegraph.co.uk/news/2016/06/16/leave-or-remain-in-the-eu-the-arguments-for-and-against-brexit/> (accessed June 29, 2016).

on a multifaceted approach to security matters based on information drawn from intelligence sources placed both within and outside their territori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progressively proved to be a close partner to the UK and may have contributed to the relatively long periods that the UK has been free from devastating terror attacks.

However, with the UK having left the EU,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shall need to be restructured in order to have it fit in the new dispensation. Does the UK maintain its same level of importance to the US? Equally, the EU may need to review some of its agreements with the US as a result of the Brexit

III. United States' Role in European Security in Light of Brexit

As suggested by many in post-Brexit analysis, an EU without the UK and leaves a state of confusion in European matters of security. With the union having been in a process of bolstering security in the region, the exit of Britain introduces an unforeseen period of uncertainty. While a member of the EU, Britain occupied a leadership position, particularly for aspects of security, making it much more influential than many of the smaller states. As a result of comparable ideologies, geo-political objectives, and established trust, the US too has held a key partnership role in the maintenance of security in the European Security. In this regard NATO may be seen as being a key arm that enables EU and extra-EU security cooperation.

According to Pranushka (2015), the Security of the US is directly linked to that of Europe due to similarities in governance ideologies and the large numbers of people moving between the two continents. Ideally, the security of the European countries needs to be a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s governing the region²¹⁾. Nevertheless,

21) Hallams, Ellen. *The United States and NATO since 9/11: The Transatlantic Alliance Renewed*. London: Routledge, 2009.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s that exist among some countries' leadership in the region, it proves difficult to have unconditional unity. It is this factor that leaves it possible for the influence of an external unifying factor that enables member states to recognize the need to maintain cohesion in the region. With the United States having huge investments in all parts of Europe, it is indeed well positioned to enhance security in the region. The role of the US in the European security can therefore, be augmented into identifiable responsibilities all of which function towards realizing a more secure region.

At the outset, the US will recognize that the effects of a European Union without the UK presents security challenges that might cross into the American interests. The main cause of the unforeseen security challenges after the exit of the UK may not be identifiable with any specific activity that characterizes the Brexit. Nevertheless, the disunity sparked in the region by the Brexit must be stemmed to avoid a beginning-of-the-end scenario to the good corporation among European countries in matters of combating insecurity. The goodwill with which members of the EU had been sharing classified security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their common economy is now newly challenged by UK's decision²²⁾. Leaders of the union's member states shall begin to reason and plan for their countries instead of striving to emphasis consideration of the union's wellbeing.

With such expected disunity among member states, the US may need to weigh in on the various contentious matters that led to the exit of the UK in order to encourage a more united Europe. To achieve this, the US leadership may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NATO, an organization whose existence to be a remarkable unifying factor in security for many European nations, yet whose relevance in the post-Cold War era has diminished²³⁾. The organization's meetings may offer a summit in which

22)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Brexit*. June 22, 2016. <http://soutangroup.com/tsg-intelbrief-the-security-implications-of-brexite/> (accessed June 30, 2016).

23) Møller, Professor Bjørn. *European Security: The Roles of Regional Organisations*.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2012.

European member states and the UK alike can be encouraged to remain united in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regional security. The US equally may be able to encourage a wider mandate of NATO that enables the UK and the EU to continue to cooperate on contemporary concerns; in this regard it may be well positioned to spearhead programs that support countries suffering the effects of transnational criminal activities.

In addition to using NATO, and other forums that involve European nations, to encourage unity in the region, the US may be able to play a further role in future unifying activities²⁴). For instance, the US may prefer adhering to the EU's regulations on trade as opposed to prioritizing trade with single nations in order to encourage the union's existence. The US, as a key trading partner of the EU, can also influence how the union is structured in order to address the key issues that led to the exit of Britain from the EU. With such issues addressed, the EU and the region in general may be able to achieve higher levels of cooperation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global partners.

By assisting European states in attaining increased unity,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secured its own interests of enabling Europe's existence as a more secure region. A unified Europe would see easy sharing of information and coordination in matters regarding cross-border movements. This would also enable nations in the region to work collectively towards conducting conclusive investigations on matters that concern security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A unified region would ensure easy identification of transnational criminal elements as a result of increased information sharing. Therefore, it is plausible to deduce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nsider itself to have a role in uniting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during a time of vulnerability and instability as a result of Brexit.

The United States already holds a position that makes it a world leader in many aspects. In terms of economic strength, political stability, military strength and

24) Møller, Professor Bjørn. *European Security: The Roles of Regional Organisations*.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2012.

functionality of the state's governing institutions the US holds a leadership position in the world that prompts many nations to emulate it. In Europe, many nations have indirectly copied the setting of the US political governance in order to attain more stability²⁵⁾. Other nations in the region continue undertaking benchmarking activities in the reg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aspects that have positioned the US in a leadership position for several decades.

As a result of its international mandate and capabilities, the US has a responsibility in the UN an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pearhead programs or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wards enhancing unity in the world. This responsibility through the UN is usually bestowed on all member countries but those that are more capable than others are those that bear the responsibility of making international mandates a reality. In Europe, the US has direct partnerships with many countries that share in NATO membership or in other institutional agreements. The partnerships were mainly created out of a need to realize mutual benefits between the US and its partner countries and blocks.

Being an economic leader globally, the US has constantly sought markets for its products by entering into trade and travel agreements with many European countries. Europe has always presented American countries with a ready market for most goods produced by its industries because of the regions large middle class consumers. Alongside the agreements entered into by between the US and European Union states either through the EU or bilaterally, other discussions on regional cooperation and security usually emerge²⁶⁾. It is through such forums that the US, through its experiences in matters of international security offers the requisite guidance to the concerned nations.

Being extensively present in European affairs also offers the US an opportunity to

25) Bindi, Federiga, and Irina Angelescu, *The Foreign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Assessing Europe's Role in the World*, New York: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2.

26) Hallams, Ellen, *The United States and NATO since 9/11: The Transatlantic Alliance Renewed*, London: Routledge, 2009.

understand the existing regional security concerns that may not be shared as such through forums like the EU. The United States' strong security intelligence networks that are deployed in all parts of the world places the country at a critical vantage point in terms of receiving crucial information. At times, the crucial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intelligence networks may not be potentially harmful to the US but likely to harm other nations. Therefore in order to have its global leadership position in terms of security information ought to be shared with the concerned nations in order to prevent possible criminal activities.

By sharing classified security intelligence information retrieved through its advanced security equipment and personnel, the US will be fulfilling an important obligation. In Europe, most countries have extensively embraced technology in collecting security intelligence information²⁷⁾. Such technology has proved very helpful with the member countries sharing of information through the EU framework. Nevertheless, with the exit of the UK from the Union and as such a structural failure of the union, security information may not be sufficiently shared between nations in coming years. It is therefore, as a result of that eminent security challenge that the United States may need to assume greater European leadership where possible and be willing to fill the gap and share its information with European countries that express goodwill in fighting of international criminal activities. This would enable the country to protect both its private and public investments in the European region as well as contribute towards a reduction of terrorism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s.

The United States may utilize its strategic position in the region to further pursue the ending of conflicts among European nations. In recent decades, there have been minor disagreements between nations in the EU;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he UK and Spain over Gibraltar is one such example. Most countries in the region had suppressed those conflicts as a result of the spirit of regional integration that the EU had provided. However, with Brexit the unity that has been enjoyed in the region may

27) Leifer, Michael. *Constraints and Adjustments in British Foreign Policy (Routledge Revivals)*. London: Routledge, 2013.

be met with reinvigorated interstate conflicts. The European regional history tells everything about how devastating the results of such conflicts can become.²⁸⁾ Therefore, the US may seek to work towards the mitigation of conflicts that may arise among countries in Europe as a method of preempting the revival of historic conflicts that could in the longer term impact US interests.

Should further states follow the UK and withdraw from the EU then the ongoing functionality of the organization may be further drawn into ques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ew countries in the EU possess significant military budgets. The UK was one such country but with its withdrawal from the Union the ability for the EU to provide a global military presence is hampered. In this sense, the US, whose spending greatly outmatches even its closest rival, China, may become more depended upon in facing organized or state sponsored terrorist activities. The wide-reaching spread of ISIS in this regard may be considered an emerging threat that challenged existing capabilities even prior to the unity challenges presented by Brexit. The US may both be expected to and need to utilize its military strength to provide aid in terms of equipment and personnel in the case that a European nation faces the eventuality of a large scale terrorist attack.

Finally, with the role of the EU potentially diminished as a security providing organization, the role of NATO may become reemphasized to levels not seen since the Cold War. NATO now seems better positioned to encompass the dominant security capable states. This means that the US, as NATO's principle financier, may find itself in a reaffirmed position of influence and leadership in Europe's security areas. This may also mean that the US must make sure that NATO is prepared to address contemporary security concerns such as terrorism. These concerns are notably in contrast to its traditional role as peacekeeper through conventional military forces.²⁹⁾

28) Tocci, Nathalie. *Imagining Europe: Towards a More United and Effective EU*. Leicester: Edizioni Nuova Cultura, 2014.

29) Terzuolo, Eric. *NATO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gional Alliance, Global Threats*. London: Routledge, 2009.

By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a more secure Europe, investors from the US will gain more confidence in making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region contributing to strengthening of the country's economy even further. Conversely, security in Europe will translate to greater US security. As such, while the Brexit poses an immediate challenge to the contemporary security environment, there may be fallback mechanisms that can be reshaped and reinvigorated to re-secure the region.

NATO is not anticipated to accrue significant adverse effects resulting from the Brexit. The vote by the UK to exit EU shall not have any direct impact on running the affairs of NATO since the latter had not entered into any agreement with former based on its membership in the EU. However, as many analysts insisted that a vote by the UK to exit would have implications for a weakened and less united Europe.³⁰⁾ Consequently, this may result in a more aggressive foreign policy by Russia against NATO in the future. Additionally, NATO stands to suffer some forms of disunity and mistrust meant to emerge as a ripple effect coming from effects of the Brexit. This might be mainly driven by the many members in the EU that continue to share membership with the UK in NATO. Nevertheless, a unanimous decision by NATO members to shield it from suffering any security ripple effects from the negative matters emerging from other regional would enable the organization fill any gaps created by the unforeseen disunity of the EU.

IV. Collective Security and the CSDP

The main concern for security experts in Europe has been the absence of a robust defense and security strategy created and managed by the EU. Despite of the instrumentality of NATO in combating state level threats, more needs to be done to ensure that the EU is able to provide its own security capability that can address its

30) Cini, Michelle. *European Union Politic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unique concerns. The fact that economic progress cannot be achieved in the face of regional insecurity had prompted the EU to make several strides towards achieving a more workable security strategy³¹⁾. Unfortunately, the exit of Britain from the EU shall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progress achieved by the union in creating a common security strategy.

With signing of the Lisbon Treaty, EU nations agreed to develop their security strategy from a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ESDP) to a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CSDP). The main aim of the new policy was securing EU nations against international criminal activities. The member states (including the UK) agreed to shift from an earlier strategy of mutual assistance to that of active ensuring of collective security. The CSDP treaty introduced a new mechanism that aimed at allowing the development of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that allows willing member states to pursue military integration within the EU framework.

The CSDP employs a multifaceted approach to decision making. Its decisions are made by a council made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nd also defense ministers from member states. Decision making also relies on counsel from Political and Security Committee (PSC) and the EU Military Committee.³²⁾ Other sources of advice for decision making are the Civilian Committee and recognized Geographical working groups. The CSDP utilizes permanent military and political bod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after the approval from the Security Council. Having earlier created a strategy that relies on five CSDP operational headquarters which include London, the EU shall need to make structural changes that reflect post-Brexit capabilities and staging.³³⁾

The collective approach to security envisioned by the formation of CSDP was an

31) Wallace, Helen, Mark A. Pollack, and Alasdair R. Young. *Policy-making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32) Fuhrmann, Matthew, and Todd S.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 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 no. 4 (2014): 919-935.

33) Cini, Michelle. *European Union Politic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agreement reached with the UK as a full member of the union. While the possibility of a Brexit was understood when the agreement was made, other member states did not view it as likely. When the decision to exit the union was made by the British people, two possibilities existed for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CSDP; the approach to security through CSDP may surge on despite the UK's exit or the decision by Britain may spell doom for a collective approach.

The CSDP has been carefully developed to reflect both the varying capabilities and vulnerabilities of the different states of the Union. Therefore, with the exit of the UK, the CSDP is expected to continue making attempts towards enabling the EU to combat international threats to security. Nevertheless, having been a key participant in the formation of the collective approach towards tackling insecurity, the UK has had a great deal of its resources and national strategies marshaled towards CSDP strategy.³⁴⁾ Hence, the best approach to take for both parties may be to develop a security initiative within the EU framework that can partner with an independent UK.

Indeed, a renegotiated security deal with the EU would be better than an isolated Britain that does not participate in key forums that control the region's security. An independent UK providing its own security independently is predicted to have increased defense spending and inefficiencies resulting from overlaps with capabilities that would have existed in the EU framework.³⁵⁾ However, a renegotiated deal with the EU would also lead to additional costs making it an expensive affair for Britain to negotiate with a team of countries that it does not belong to. An arms-length relationship with the EU on matters of CSDP would equally mean less involvement in the EU security strategies and a lesser stake in the CSDP.³⁶⁾

On the other hand, it is agreeable that the Brexit does not alter the agenda of other

34) Leiter, Michael. *Constraints and Adjustments in British Foreign Policy (Routledge Revivals)*. London: Routledge, 2013.

35)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Brexit*. June 22, 2016. <http://soufangroup.com/tsg-intelbrief-the-security-implications-of-brexit/> (accessed June 30, 2016).

36) Cini, Michelle. *European Union Politic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EU countries towards developing and realizing a functional CSDP. The only observable effects expected to befall its implementation is a slowed down process and constrained resources due to the gap created by the exit of a key union member. With the EU members having earlier conducted the preliminary planning on the functionality of CSDP, budgeting must have been one of the preliminary items. As it happens in other areas of budgeting in the EU, member countries are bestowed contributing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endowment.³⁷⁾ Therefore, considering its level of resourcefulness, the UK would have played a major role in contributing towards a resourceful CSDP. Consequently, its exit shall slow down the CSDP formation as the EU restructures its approach to resource provision by the remaining member states.

However, despite the Brexit, the EU ought not to be limited in the ambition that led to the commencement of CSDP formation. The exit of UK has undoubtedly casted a feeling of uncertainty for the EU. Nevertheless, the remaining membership is made up of several rapidly developing nations that may soon fill the gap left by the UK's capabilities.³⁸⁾ Other countries will regardless need to take up the seemingly huge responsibility of leadership and ensure the success of CSDP. The economic benefits continuously drawn from the union by the remaining developing member states shall eventually enable them to effectively fill the resources gap left by the UK in the near future³⁹⁾. Despite the exit, the UK shall still need to engage with the CSDP as an external partner in order to co-exist well with its neighbors who continue to be members in EU and share in many regional security concerns.

By exiting the EU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a collective strategy to combat international crime as envisioned earlier by Tony Blair, the UK leaves the EU to run

37) Larivé, Maxime H. A. *Debating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London: Routledge, 2016.

38) Cini, Michelle. *European Union Politic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39) Larivé, Maxime H. A. *Debating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London: Routledge, 2016.

a plan that was conceived on its own land. This serves as disadvantageous to the EU because the British effort to support the CSDP would be highly instrumental in making contributions towards making it functional. However, the EU boasts a remainder of significant military power through principally Germany, France and Italy which each maintain significant forces.⁴⁰⁾ The absence of Britai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y also challenges an imperative leadership figure that would be in a position to provide guidance in structuring the modalities of implementation.

The CSDP strategy has been dented by the exit of Britain due to the foreseen partnering with the US. Before the referendum date, the US continuously pressured the UK to maintain its membership in the EU as it would enable easy engagement between the US and the EU. Having been partners in various areas of mutual interest, especially in governance, the UK has always been a strategic ally for the US in EU matters. In many past instances, Britain has been seen to advance agendas that were closely identifiable with the US in the EU. It is unfortunate for the US that the exit of Britain might impact the reflection of its own security interests in the new EU security strategy.

With careful handling of the EU matters by the remaining member states, it is the UK that stands to be at greatest loss in security for its decision to exit the union. In order to have a new functional security-based partnership in the wake of increasing global terror activities, the UK's best choice would have been to continue and promote its leadership role in crafting the CSDP. The current far reaching cuts in national spending to the defense budget do not seem to allow the UK to stretch out to the pacific region for other security partnerships.⁴¹⁾ Such partnerships would require added allocation of resources, increased spending, a factor that would not be supported by citizens.

Equally, the US would not be highly interested in a serious bilateral security deal

40) Fuhrmann, Matthew, and Todd S.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 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 no. 4 (2014): 919–935.

41) Boswell, Timothy Eric. *HLP 122 - The Eu Referendum and EU Reform*,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16.

with UK. The US would prefer a more strategic partnership with a unified union that brings in multiple partner countries like Germany, France, Italy, Spain and Poland together in order to address its strategic interests in the region. Similarly, the UK shall find it hard to reach security deals with any of the European nations that remain in the EU. Aforementioned powerful countries might be ready to enter into security agreements with the UK but likely only within the confines of CSDP provisions.

V. Conclusion

The exit of Britain from the EU is an unanticipated occurrence that will be followed by numerous implications set to manifest both in the short-run and the long-run. In the recent past, regional security has been one of the key areas of concern in the union resulting in the adoption of a collective approach to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One of the key areas that will be affected by the Brexit is the CSDP that had been under development in order to ensure a more secure Europe. With the EU having made remarkable strides towards the effective sharing of classified security information and partnerships in combatting crime, the exit of Britain is a shock that will likely caution the future of a process that had been aiming at bolstering European security. In this same regard, security in Europe shall also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UK lacking a European framework in which it may share important security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gion.

Additionally, the UK's exit potentially means a less united Europe, a factor that may provide opportunities for organized terrorist groups like IS and Al-Qaida to pursue their agenda. The impending revisions of agreements between the UK and the EU with further a period characterized by uncertainties.⁴²⁾

42) Lee, Timothy B, *Brexit: the 7 most important arguments for Britain to leave the EU*, June 25, 2016. <http://www.vox.com/2016/6/22/11992106/brexit-arguments> (accessed June 29, 2016).

With the exit of the UK from the EU, the United States relationship with these two actors will shift. It is expected to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improving the levels of security in the European region and maintaining relations between the separating parties. The security of the US is known to be linked to that of Europe due to the high presence of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activities. Therefore, the US needs to play a unifying or stabilizing role in the region diplomatically and supplement any lacking leadership in Europe's future approaches to regional security matters. While the CSDP is expected to be negatively affected, continued UK involvement with NATO alongside many EU partners is one positive aspect that may be used to maintain high levels of security particularl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ing in its final stages of formation, the CSDP has greatly relied in the contributions made by the UK in the form of ideologies and tangible resources. The Brexit leaves a gap in the CSDP that shall undoubtedly slow down the realization of functional security structure that had been shaped to be the future of EU security. NATO shall may prove to be a gap filler though this will require its own refocusing on contemporary threats that differ greatly from those that existed at the outset of the organization; as such there will be considerable room for US influence in near-term EU security considerations.

In summary, the Brexit poses numerous adverse implications to the security of the entire European region and to a large extent, the UK's domestic security. Such security implications include non-cooperation in matters of regional security, increased border insecurity for the UK and a potential for terrorist opportunism. Nevertheless, both the UK and the EU's motivations to maintain regional security are undiminished as a result of unaffected common interests in this area. Both the parties have several alternative courses of action at their disposal through which the effects of Brexit on security can and will likely be contained.

Bibliography

- Amphas–Mampoua.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European Security*. Pittsburgh: Dorrance Publishing, 2014.
- Barnes, Colin. *Disabled People in Britain and Discrimination: A Case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Dublin: C. Hurst & Co. Publishers, 2001.
- Bindi, Federiga, and Irina Angelescu. *The Foreign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Assessing Europe's Role in the World*. New York: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2.
- Boening, Astrid, Jan–Frederik Kremer, and Aukje van Loon. *Global Power Europe – Vol. 1: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to the EU's External Relations*. Londo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3.
- Boswell, Timothy Eric. *HLP 122 – The Eu Referendum and EU Reform*.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16.
- Chappell, Laura. *The EU, Strategy and Security Policy: Regional and Strategic Challenges*. London: Routledge, 2016.
- Cini, Michelle. *European Union Politic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Fuhrmann, Matthew, and Todd S.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 no. 4 (2014): 919–935.
- Hallams, Ellen. *The United States and NATO since 9/11: The Transatlantic Alliance Renewed*. London: Routledge, 2009.
- Howorth, Joly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4.
- Hyde–Price, Adrian. *European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Challenge of Multipolarity*. London: Routledge, 2007.
- John Baylis, Jon Roper.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eyond the Neo–Conservative Divide?* London: Routledge, 2007.
- Johnson, Stuart E., John IV Gordon, Peter A. Wilson, and Caroline Baxter. *NATO and the Challenges of Austerity*. Canberra: Rand Corporation, 2012.

- Jokela, Juha. *Europeanisation and Foreign Policy: State Identity in Finland and Britain*. London: Routledge, 2010.
- Jordan, Amos A., and William J. Taylor. *American National Security*. New York: JHU Press, 2011.
- Kay, Sean, and Mark R. Rubin. *NATO After Fifty Year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1.
- Kenealy, Daniel, John Peterson, and Richard Corbett. *The European Union: How Does it Work?*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Koenig, Nicole. *EU Security Policy and Crisis Management: A Quest for Coherence*. Manchester: Nicole Koenig, 2016.
- Lariv, Maxime H. A. *Debating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London: Routledge, 2016.
- Laursen, Finn. *The EU and Federalism: Politics and Policies Compared*.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2013.
- Lee, Timothy B. *Brexit: the 7 most important arguments for Britain to leave the EU*. June 25, 2016. <http://www.vox.com/2016/6/22/11992106/brexit-arguments> (accessed June 29, 2016).
- Leifer, Michael. *Constraints and Adjustments in British Foreign Policy (Routledge Revivals)*. London: Routledge, 2013.
- McGowan, Lee, and David Phinnemore. *A Dictionary of the European Union*. London: Routledge, 2015.
- McKenzie, Mary M., and Peter H. Loedel. *The Promise and Reality of European Security Cooperation: States, Interests, and Institutions*.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10.
- Møller, Professor Bjørn. *European Security: The Roles of Regional Organisations*.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2012.
- Naidoo, Pranushka. *Should the UK leave the EU or consider an EEA relationship? A question of supremacy*. Manchester : GRIN Verlag, 2015.
- Oswald, Franz.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Emerging Security Partnership*.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15.
- Ottaway, Richard. *Foreign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UK and Scotland in the event*

- of Scotland becoming an independent country: sixth report of session 2012–13, report, together with formal minutes, oral and written evidenc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13.
- , *Future inter-parliamentary scrutiny of EU foreign, defence and security policy: first report of session 2010–11, report, together with formal minutes, and written evidenc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12.
- Pohl, Benjamin. *EU Foreign Policy and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Power, Purpose and Domestic Politics.* London: Routledge, 2014.
- Riley-Smith, Ben. *Leave or Remain in the EU?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Brexit.* JUNE 20, 2016. <http://www.telegraph.co.uk/news/2016/06/16/leave-or-remain-in-the-eu-the-arguments-for-and-against-brexit/> (accessed June 29, 2016).
- Schmidt, Peter, and Benjamin Zyla. *European Security Policy and Strategic Culture.* London: Routledge, 2013.
- Tashev, Blagovest, and Professor Tom Lansford. *Old Europe, New Europe and the US: Renegotiating Transatlantic Security in the Post 9/11 Era.*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2013.
- Terzuolo, Eric. *NATO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gional Alliance, Global Threats.* London: Routledge, 2009.
-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Brexit.* June 22, 2016. <http://soufangroup.com/tsg-intelbrief-the-security-implications-of-brexit/> (accessed June 30, 2016).
- Tocci, Nathalie. *Imagining Europe: Towards a More United and Effective EU.* Leceister: Edizioni Nuova Cultura, 2014.
- Vimont, Pierre. *The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National Perspectives.* Manchester: Academia Press, 2015.
- Wallace, and Mark A. Pollack. *Policy-making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Wallace, Helen, Mark A. Pollack, and Alasdair R. Young. *Policy-making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Williams, and John Michael. “Enduring, but irrelevant? Britain, NATO and the future of the Atlantic alliance.” *International Politics* 50, 2013: 360–386.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파장과 우리의 시사점

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 차

- I. 서론
- II.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이민 및 난민 관련 정책
- III.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난민 문제 관련 정책
- IV.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쟁점과 법적 전개 과정
- V.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I. 서론

2016년 11월 8일 미국은 제 45대 미국 대통령과 제 115대 연방 상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많은 선거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고 대통령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공화당 후보가 대의원 306석을 확보하여 232석 확보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¹⁾ 연방의회 선거 결과는 상원의석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여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하원에서는 총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을 차지하여 194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제치고 역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²⁾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면모와 그들의 정책적 입장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의 압도적 우세를 예상하였으나, 경선 초반부터 무소속이었다가 민주당에 입당한 버니 샌더스(Bernie

1) 총 유권자 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1,201,031표를 받아, 힐러리 클린턴이 받은 62,523,126표에 비해 약 132만표 이상 뒤진 결과를 낳았다.

2) 연방상원의 경우는 3분의 1씩 선출하는 절차에 따라 이번 선거의 차례가 된 Class 1의 34석의 상원의원을 선출하였고 연방하원은 435석 전원을 선출하였다.

Sanders) 상원의원이, 공화당에서는 공직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도널드 트럼프가 약진하면서 미국 정계의 아웃사이더들의 돌풍이 일어났다. 양당의 이 같은 아웃사이더들의 약진은 미국에서 “워싱턴 D.C. 정치인들 (D.C. Politicians)”이라고 표현되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마는 기득권 중심의 정치에 대한 실망이 극도에 달한 미국 유권자들의 좌절과 분노가 표출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샌더스 현상”과 “트럼프 현상”은 본질적으로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현상이라는 관점을 내놓기도 하였다.

공화당 지지층 중에서 특히 저소득, 저학력 백인층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신고립주의적 정책으로 미국을 이끌겠다는 트럼프를 적극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또한 자신의 열성 지지층인 이들을 향해 각종 고립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이민과 국경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후 일주일여 만에 이민과 난민의 미국유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가지는 국내외적 파장에서 우리도 벗어나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의 내용과 논란 사항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이민 및 난민 관련 정책

1. 공화당의 이민 및 난민 정책

공화당의 이민 관련 정책은 2016년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정부개혁(Government Reform)』장(章)의 ‘이민과 법치(Immigration and the Rule of Law)’ 항목과 『미국의 불활(America Resurgent)』장(章)의 ‘위험에 직면 (Confronting the Dangers)’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이민과 법치’ 부분은 “우리 당은 자유와 정의를 찾는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가정이다(Our party is the natural home for those who come in search of freedom and justice)”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여 공화당이 이민자들에게 폐쇄적인 정당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³⁾ 그러나 바로 그

3) Republican Platform p.25

다음 단락에서 공화당이 지향하는 이민정책의 경계를 분명히 지어놓고 있다.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이민관련한 부분의 두번째 단락은 미국 경제의 위대한 자원은 미국의 노동자들이라고 선언하고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이민제도는 미국 시민권자들과 합법적 이민자들을 포함하여, 미국인 근로자 가정과 그들의 임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이민자 문제에 대한 정책으로 첫째, 남쪽 국경에 장벽 건설 둘째, 전자 신원확인 프로그램 (E-verify program) 의무 사용 제도, 셋째, 외래인 신원확인 프로그램 (System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SAVE) 도입, 국토안전부의 반불법이민 활동 강화, 넷째, 불법이민자들에게 관대한 이른바 ‘보호구역 도시(sanctuary cities)’들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공화당이 제시한 이민자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경의 장벽은 미국 남부 국경 전체에 건설이 필요하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월경과 도보를 통한 월경 모두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제시한 두 번째 정책인 전자 신원확인 프로그램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된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화당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정책은 외래인 신원확인 프로그램(SAVE)은 미국 내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적 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신원확인 프로그램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 공화당은 허위 신분증과 같은 문서 위조 및 불법 이민자들의 이동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또 국토안전부에 대해서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에 더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범죄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일 미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하였다가 추방된 전력이 있는 불법이민자가 재입국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보호구역 도시’들에 대해서는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하는 한편, 이들로 인해 미국 시민들이 위험에 처해있으므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중단을 요구하였다.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4) Republican Platform p.25

이들로 인해 미국의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이민자 문제 항목의 마지막에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미국이 건국초기부터 난민과 망명자들에게 보호처가 되어왔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전통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대변혁(Major Changes)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변혁이란 망명의 경우,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박해의 사례에 한정되어야 하고,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신분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난민의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테러와 관련된 국가 출신일 경우 더욱더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민과 국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두 번째 분야인 『미국의 불활(America Resurgent)』장(章)은 미국의 이민 및 난민 정책과 국경문제를 미국인들을 위협에 노출시킨 국가안보의 문제로 재차 적시하고, 국경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의 이민법을 집행하며, 난민과 이민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를 통해 미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민과 난민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들의 출신국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나라로부터(any country)”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통제 강화를 언급하고 있어 최소한 공화당의 정강정책에서는 이슬람권에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을 특정지어 분류하는 인종 및 종교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나, 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테러 지원 국가들(terror-sponsoring countries) 이슬람 테러와 관련된 지역(regions associated with Islamic terrorism) 출신의 미국 유입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⁵⁾ 공화당 정강정책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시행했던 국가안보 입출국 등록제도(National Security Entry-Exit Registration System)을 성공적인 국경안보 정책의 예로 들면서 이제도의 재 시행을 주장하였다.

2.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 및 난민 문제 관련 공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 기치아래 논란이 된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민 관련 부분의 정책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선거 기간 중에 그가 ‘미국을 다시 위대

5) p.42

하게 만들 이민 개혁(Immigration Reform That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제하에 제시한 이민 정책은 세 가지 핵심원칙(core principle)에 근간하고 있다.

(1) 국경이 없는 국가는 국가라 할 수 없다. (A nation without borders is not a nation)

- 남부 국경에는 반드시 장벽이 있어야 한다. (There must be a wall across the southern border)

(2) 법이 준수되지 않는 국가는 국가라 할 수 없다. (A nation without laws is not a nation)

- 헌법상 정부체계에 합치되는 법안들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Laws passed in accordance with our Constitutional system of government must be enforced.)

(3) 자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A nation that does not serve its own citizens is not a nation)

- 모든 이민 정책은 모든 미국민들의 일자리, 급여 그리고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Any immigration plan must improve jobs, wages and security for all Americans)

이러한 3대 핵심원칙 하에 트럼프는 이민 개혁관련 3대 정책기조들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는 '멕시코에게 장벽 건설비용 전가(Make Mexico Pay For The Wall)'이다.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공약집은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범죄와 빈곤을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송출하여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막대하게 증가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트럼프 선거본부의 정책집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미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그 중 주요 항목들은 의료비용, 주택비용, 교육비용, 복지혜택 등이다.

트럼프 공약집에서는 미국이 이렇듯 부당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반면, 멕시코는 불합리한 통

상협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내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자금 역시 막대한 규모라고 주장하면서 멕시코는 합법, 불법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므로 문제에 책임이 있는 멕시코가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멕시코가 장벽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공약집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본국에 송환하려할 시 압류조치
- 멕시코 국정의 기업인들과 외교관들에게 발급되는 미국입국 사증 발급비용 인상 (필요할 경우 사증 무효화),
- 모든 국경 통행증(Border Crossing Cards)에 대한 수수료 인상
- 북미자유협정(NAFTA)에 의거한 노동 사증 수수료 인상
-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만 수수료 인상
 - * 관세와 대멕시코 원조 삭감 등은 선택적 조치사항

트럼프 공약집의 이민관련 두 번째 정책기조는 ‘미국의 헌법과 법 수호(Defend The Laws And Co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이다. 트럼프 진영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안들은 다음과 같다.

- 이민관세 수사청 인력 세배 증원 (Triple the number of ICE officers)
- 트럼프 진영은 로스엔젤레스 경찰국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수가 약 만명인데 비해 이민관세 수사청에서 실제로 현장 근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약 5천명에 불과하며, 이들 5천여 명의 인력이 미국 50개 주와 함께 푸에르토리코, 괌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약 천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민관세 수사청의 현장근무 인력을 세배로 증원하겠다고 공언하였다.

- 전자신원확인 시스템의 전국 확대(Nationwide e-verify)

- 전자신원 확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활용되면 실직상태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범죄전력이 있는 이민자 추방 (Mandatory return of all criminal aliens)

-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한 해에만도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 7만6천명을 석방하였다고 비판하며,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은 반드시 출신국으로 송환할 것을 공언하였다.

- 체포 후 석방 없는 구금 (Detention-not catch-and-release)

- 불법으로 월경하다 체포된 이들은 출신국으로 추방이 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 ‘보호구역 도시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삭감 (Defund sanctuary cities)

- 연방법의 집행에 협조를 거부하는 시 정부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 삭감

- 사증의 체류기간을 어길 시 처벌 강화 (Enhanced penalties for overstaying a visa)

- 한시적 사증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의 수가 수백만에 달하고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트럼프 진영은 사증에서 허가한 기간 이상 미국내 체류하는 이들을 형사범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지역 사법당국이 연방당국이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체

류기간을 어긴 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법적인 의무사항이지만 로비에 의해 중단된 사증추적 시스템(visa tracking system)의 시행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지역 조직범죄 수사당국과 공조 (Cooperate with local gang task forces)

- 지역의 조직범죄 수사당국이 조직범죄 소탕작전을 벌일 경우 이민관세 수사청 수사인력이 동행하여 범죄조직에 소속된 불법 이민자들 색출 및 추방 작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속지주의 시민권 부여 중단 (End birthright citizenship)

- 트럼프 진영은 시민권의 속지주의가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입국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는 것이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정책 기조는 ‘미국인 노동자 우선주의(Put American Workers First)’이다. 트럼프 공약집은 재앙적인 무역 협정과 이민정책의 결과 중산층이 붕괴하였으며, 흑인 십대의 실업률이 40%, 히스패닉 십대의 실업률이 30%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불법 이민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모두 차지하여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취업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빈곤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임금상승, 십대취업률 상승, 유색인종의 중산층화 도모, 학교와 공동체의 낙후화 방지, 그리고 이민자 가정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취업사증로 미국내 취업 시 지불하는 임금 인상 (Increase prevailing wage for H-1Bs)

- 트럼프 공약집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학위(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degrees: STEM)를 취득하는 미국인들의 절반가량이 해당 직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반면, 관련 직종의 비경력직(entry-level) 일자리 중 최대 3분의 2정도가 취업사증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을 트럼프 진영은 취업사증을 통해 취업하는 이들에게 IT기업들이 지불하는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데 있다고 분석하면서 취업사증의 임금 수준을 높일 경우 관련 기업들이 외국인들 보다는 미국인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미국인 근로자 우선 고용 의무화 (Requirement to hire American workers first)

- 미국 정부는 외국인 고용 사증을 발급하면서 내국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실직상태에 놓였고,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해야하는 환경 때문에 임금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진단하고, 기업들이 미국인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복지제도 악용근절 (End welfare abuse)

- 이민자들이 미국의 복지혜택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으로 이민신청 단계에서 미국내 거주 주택구입비용, 의료보험 비용 등을 자부담할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심사 실시

○ 도시 청소년 고용프로그램 (Jobs program for inner city youth)

- 외국 청년들에게 미국내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J-1 사증 제도를 중단하고 대신 J-1 사증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미국의 도시거주 청년들의 이력서를 받아볼 수 있는 취업은행(Resume Bank) 제도 운용

○ 미국 어린이들을 위한 구난 프로그램 운용(Refugee program for American children)

- 미국으로의 망명과 난민 신청 허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미국의 이민제도 및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절감한 연방정부의 비용을 미국의 고아들에게 보

다 안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제공하고, 우범지역의 범죄율을 낮춰 안전한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주장

○ 이민자 유입완화 (Immigration moderation)

-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영주권이 발부되기 전에 미국인 고용주들이 미국내 기거주중인 이민자 및 미국인 미취업자들을 먼저 고용하도록 유예기간들 둘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 고용률 증대, 임금 상승, 치솟은 이민자 유입세를 완화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Ⅲ.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난민 문제 관련 정책

2017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민자 문제 및 국경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보여주는 조취들을 취해왔다. 우선 참모진의 구성에서 대표적인 안보 강경론자이자 반이민주의자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Steve Banon)을 백악관 수석정책 고문으로 임명한 것을 필두로, 비록 러시아 스캔들로 임명 한달여 만에 낙마하였으나,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장(Director of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 행정부의 구성에서는 이민자 문제를 관장하는 부처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HS) 장관으로는 존 켈리 (John Kelly) 전 남부군 사령관을 임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거행 후 일주일만인 1월 27일 이민에 관한 행정명령 13769호를 발령하였다.⁶⁾ 미국 언론에 의해 ‘여행금지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Travel Ban)’ 또는 ‘이슬람 금지령(Muslim Ban)’으로 명명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모두 11개의 절(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행정명령 13769호의 공식 명칭은 ‘행정명령 13769호 : 외국인 테러리스트의 미국입국으로부터 국가 보호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 1절: 행정명령의 목적(Purpose of The Executive Order)
 - 사증 발급 과정은 테러와 연관성이 있는 인물들을 사전에 탐지하고, 그들의 미국입국을 차단해야하지만, 현행 미국의 제도는 국무부 담당자들이 사증 신청자들에 대한 적절한 신원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9/11 테러 공격을 막지 못하였다.
 - 9/11 이후에도 미국에서 해외출생자들이 테러와 연관된 범죄로 유죄를 받거나 연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미국은 사증발급 과정에서 미국을 해하려들거나 테러와 연관있는자들을 색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절 : 특별고려대상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및 기타 이민관련 혜택 잠정 중단 조치 (Suspension of Issuance Of Visas And Other Immigration Benefits To Nationals Of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 (a), (b), (d)항_국토안전부는 외국인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들이 미국에 위해인물이 아니며,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정부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c)항_동보고서에는 자국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국가들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30일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상 국가들은 정보제공을 개시해야 한다.
 - (c), (e-g)항_대통령은 이민과 국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 개인들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권한과 그들의 입국을 금지할 권한을 행사 할 것이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출신들의 입국은 외교, 환승, 기업 사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0일간 중지한다. 국토안전부는 입국중지 명단에 추가할 국가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국토안전부는 추가적인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 4절 : 이민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동일 검증절차 시행(Implementing Uniform Screening Standards For All Immigration Program)

(a)항_국무부, 국토안전부, 국가정보국장, FBI는 미국에 위해가 되는 인물들을 색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화된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다.

- 동일 기준에 의한 검증절차 시행
- 복수의 사증 신청자들이 동일한 문서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 허위 답변과 불순한 의도(malicious intent)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항목 추가
-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신청인이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성원(positively contributing member of society)”이며 “국익에 공헌할(make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interest)”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절차 마련
- 신청인이 범죄행위나 테러행위를 범할 의사가 있는지 판정할 절차마련

- 5절 : 2017 회계연도 내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 재조정 (Realignment Of The U.S. Refugee Admissions Program For Fiscal Year 2017)

(a),(e)항_난민수용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고, 이 기간 중 국무부, 국토안전부,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이 수용한 난민들이 미국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난민수용프로그램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20일 이후 개선된 난민수용프로그램을 통해 난민수용 절차가 재개될 것이며 국무부와 국토안전부는 국익의 여부에 따라 예외적 사안을 처리 할 수 있다.

(b)항_난민프로그램이 재개되면 정부는 종교적 박해로 난민신청을 하는 이들이 출신국에서 소수 종교에 속한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c)항_시리아 난민의 입국은 무기한 중단하며 대통령이 안보를 위해 난민수용프로그램이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재개될 것이다.

(d)항_2017 회계연도에 최대 수용난민의 인원을 기존의 11만명에서 5만명으로 삭감한다.

○ 7절 :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입국 추적시스템 개발 신속완료 (Expedited Completion of The Biometric Entry-Exit Tracking System)

(a)항_국토안전부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입국 추적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행한다.

○ 8절 : 사증 인터뷰 보안 (Visa Interview Security)

(a), (b)항_국무부의 사증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의 중단을 명하며 사증 발급을 위한 영사인 인터뷰 확대를 위해 영사증원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

○ 10절 : 투명성 및 정보 수집 (Transparency and Data Collection)

(a), (b)항 국토안전부는 매 6개월마다 다음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 테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범한 미국 내 외국인의 숫자

- 테러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질러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의 숫자

- 미국 입국 후 급진주의 세력화되거나 테러관련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 또는 테러 관련 단체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외국인의 숫자
- 미국내 외국인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적 범죄의 유형과 횟수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민관련 법집행에 있어서 기존의 연방정부 사법집행관들에게 주어졌던 법적 권한을 주정부를 포함한 지방 정부의 사법집행관들에게 까지 부여하도록 확장하여 이민 관련 법집행의 인력을 늘리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IV.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쟁점과 법적 전개 과정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769호는 공개되자마자 여러 항목에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우선 목적에 있어서 기존의 사증발급 심사제도가 테러리스트들의 미국입국을 막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 행정명령이 필요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행정명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7개 국가들에는 9/11 사태 이후 미국인을 살해한 테러범들의 출신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난민 수용프로그램의 재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5절의 내용에서는 난민 판정과 수용을 위한 절차를 추가할 것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난민 판정을 내리는 심사는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난민신청이 접수될 경우 국제연합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 High Commission on Refugee)에 의해 일차 신원조회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선별된 난민신청자들은 미국 국립 대테러 센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FBI 테러분자 조회 센터(Terrorist Screening Center),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국토안전부에 의해 재차 신원조회를 거치게 되며, 난민신청자들의 생체정보 조사와 면담조사가 국토안전부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는 최장 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만일 절차가 추가될 경우 난민신청에서 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아울러 2017 회계연도의 최대 수용 난민의 수를 당초 설정된 11만명 에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명으로 줄인 조치를 비난을 받고 있다.

행정명령 13769의 조치들 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종교적 박해로 난민이 된 자들에 관한 부분이다. 5절의 (b)항은 난민신청자의 출신국에서 소수 종교에 속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아 난민이 된 경우에 대해 미국정부가 우선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난민을 신청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국가 출신임을 감안하면 기독교계 난민에 대한 우대이자, 이슬람계 난민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는 것에 다른 아닌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⁷⁾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하여 각종 소송이 제기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효한지 약 2주만에 양측은 연방항소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 세 명의 판사가 협의하여 결론을 내린 연방항소 법원의 판단은 행정명령 13769호의 효력을 중지시킨 하급법원들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내용들 중 주요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명령 13769호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즉각적이고 포괄적(immediate and widespread)이라는 점이다. 행정명령 13769호의 발효로 인해 기발급되었던 사증 수천 건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영주권자들마저도 행정명령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법원은 효력정지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함으로써 인해 국가가 급박한 위험에 처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항소심의 판결문은 “정부는 행정명령에 거명된 국가 출신들이 미국으로 테러공격을 위해 잠입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라고 적시하여 행정명령 13769호를 집행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 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였다.

이에 더해 항소심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적시하였다. 판결문은 “정부는 이민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안보의 우려로 인해 결정된 이민정책은 비록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와 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이 안전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조치에 대해 헌법적 쟁의를 고려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

7)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참모로 활약하고 현재 백악관 사이버안보 보좌관으로 재임 중인 전 뉴욕 시장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는 미국의 팩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3769를 최초로 “이슬람 금지(Muslim Ban)”안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법적인 체계(legal framework)”를 갖춰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줄리아니는 그러나, 이 조치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위험(danger)”에 기반한 조치였다고 항변하였다. <http://www.npr.org/2017/1/31/512439121/trumps-executive-order-on-immigration-annotated>

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비사법적 판단대상(Unreviewability)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례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헌정 민주주의의 근본 구조에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행정명령도 사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항소심 판결 내용 중 흥미로운 것은 행정명령 13769호에 대해 여론이 가장 크게 비판하였던 종교적 차별, 즉 무슬림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여론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항소심은 행정명령 13769호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 본 법원은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하여 행정명령이 종교 차별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이야기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전략을 바꿔 2017년 3월 7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효되는 시점에 대하여 기존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서명한 즉시 발효되도록 하였으나, 수정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서명한 후 열흘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3월 16일부터 발효되도록 하였다. 이는 항소심 판결에서 행정명령의 효력 중지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던 효력의 발효시점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기존 행정명령에 적시되었던 이슬람 7개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하였다. 백악관은 이라크 정부가 IS 소탕작전에서 미국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라크 배제이유로 꼽았으나, 이 역시 행정명령이 사실상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의 위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시리아 난민에 대해 무기한 입국금지를 내렸던 기존 명령을 일시적 제한으로 수정하였고, 종교적 차별로 인한 난민신청자에 대해 우대적 처분을 보장하였던 내용을 삭제하였다.

넷째로 기존에 난민의 지위를 허용하였던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라크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이 왜 행정명령에 적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들을 적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추가적 보완을 첨가한 수정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행정명령 내용 중 논란이 되었던 종교차별, 행정명령의 효력 범위 등에 대한 여론과 사법적 제재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수정 행정명령이 발표되자마자 각종 소송이 제기되어서 수정 행정명령도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직면하였다.

V.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초반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여론의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립주의적, 반 자유주의적 성향의 정견을 표명하여 논란을 일으켜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그가 이전에 밝혀왔던 고립주의적이며 반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및 국경정책에서 비판을 해온 주요 대상은 남미의 이민자들과 중동의 난민들이기는 하나 행정명령은 전반적인 이민정책과 국경안보 대책을 담고 있어 법원에서라도 그 포괄성을 지적할 정도의 내용이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하겠다.

우선 사증 발급제도와 관련하여 숙련인력 취업사증인 H1-B를 통해 미국 내 취업을 하는 외국인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의 IT 관련 고급인력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실리콘 벨리의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를 비롯하여 아시아계의 인력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외국인 고용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면 이들도 불가피하게 외국인의 고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명령이 미국내 고급 인력들의 취업률이 낮은 원인을 외국의 고급인력의 유입으로 적시하고 있는 만큼 이공계 관련 미국 대학의 유학생 숫자도 정책적으로 제한하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미국에서 학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의 유학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행정명령은 또 현재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8개국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어, 향후 사증면제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⁸⁾ 미국의 사증면제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신규 국가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증 발급 거부율 기준 3% 미만이던 가입허용 규정을 2007년 7월 1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후 한국의 가입이 허용되었다. 만일 미국이 이 기준을 다시 하향 조정할 경우 한국이 더 이상 사증면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의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안전부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이후 미국내 불법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한인 불법이민자들이 체포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사증면제 대상국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8) www.dhs.gov/visa-waiver-program (접속일 : 2017.3.2.)

미국이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수준과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국의 제도적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의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사항들이 다양하고, 향후 한미 양국간 관계에 미칠 파장 또한 큰 만큼 차기 정부에서 마련할 대미정책 수립 시에는 이민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안도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문: Brexit and the Future Implications for Europe: Starting of the New Debate in Security Analysis

오영달 (충남대)

작년 6월에 있었던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영국인 투표자들 중 52%가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를 찬성함으로써 이후 영국은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인들은 유럽의 지역협력을 매우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느끼고 있으며 그 향후 사태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연합의 진전과정을 호의적인 관점에서 주의깊게 관찰해온 이 토론자 본인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유럽안보의 미래에 미칠 함의를 논의하는 전 교수님의 발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전개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전 교수님은 안보분야의 문제들 중에서도 초국가적 테러와 기타 범죄에 미치는 함의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동안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해온 공동안보방위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 향후 전망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 교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당연히 영국이든 유럽연합 전체든 부정적인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기존에 가능했던 민감한 기밀 등의 정보공유가 이제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초국가적 테러나 범죄 행위와 관련한 기존의 정보공유노력들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스본 조약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된 공동안보방위정책도 강력한 안보행위자로서 영국의 불참으로 인하여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본 토론자는 전광호 교수님의 브렉시트에 관련한 주요 함의에 대해 내린 결론 등에 대체로 동의하며 특별한 이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

의 국내정치라는 현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높은 비용 등을 고려에 넣어 고찰할 때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토론자로서 영국이 세계화와 지역화가 심화되어가는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시대역행으로 보일 수 있는 유럽연합 탈퇴를 왜 결정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첨언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 형성 노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호협약에 의하여 추진되어왔다. 그만큼 인류역사상 추진된 그 어떤 공동체 형성 노력보다도 의심의 여지없이 긍정적인 면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은 그 운영과정에서 국가 정부가 그러한 것처럼 높은 수준의 비용 또한 수반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회원국의 시민을 포함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일만한 일인 것이다.

영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로서 국내 또는 국제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이번 국민투표에서도 약 4% 더 많은 유권자들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쪽으로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영국의 시민들 중 유럽연합이 이익보다는 비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럽연합이라는 제도 하에서 자연스럽게 사람, 물품, 용역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영국의 많은 하층 노동자들은 그들의 일자리에 대하여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계속 회원국 수를 증가시켜온 유럽연합은 이제 28개 회원국을 가진 거대한 지역공동체가 되었는데 이러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중에는 영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국가들의 시민들은 높은 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영국 같은 국가들로 이주하기를 선호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인들처럼 영국이 유럽연합에 회원국으로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에 근소하게 못미친 사람들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정치가 수의 정치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1사람만 더 얻으면 그쪽으로 어떤 문제가 결정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영국의 국민투표가 그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다수결로 도출한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국민투표와 같은 집단적 결정에 있어서 더 높고 장기적인 차원의 대의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영국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는 최근 년간에 영국에서 영국독립당(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과 같이 신생 극우정당들이 반유럽통합의 기치 아래 급성장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어떤 면에서 전 교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 내 테러, 범죄 등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공동 사법정책을 통해 이러한 분야들을 위해 정보공유와 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있으면서도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가입해있는 선견협정(Schengen Agreement)의 밖에 있었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 영국은 그 국경통제권을 유지하며 이를 자율적으로 실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에서도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최근 프랑스에서 테러가 빈발하면서 이러한 테러의 주범들이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을 자유롭게 오가는 이주민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인들은 그들 자체만의 국경통제가 또다른 테러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안보측면에서도 영국인들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탈냉전 시대 이후 유럽에서는 국가 간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날 러시아가 군사강국으로서 다시 부상함에 따라 크리미아 공화국, 우크라이나 등과 관련하여 유럽인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영국으로서 유럽연합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서 접근해도 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전 교수께서도 강조하여 논의한 것처럼 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도국가인 미국과의 선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협력은 평화의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후퇴하기 보다는 더욱 진전시켜가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통합의 심화는 그에 이해관계가 닿아있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할 때 성공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에 제임즈 로즈노(James Rosenau)가 말했던 연계정치(likage politics)가 유럽연합에서 상기될 필요가 있다. 국내정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국제협력만을 추구하다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같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이제 막 본격적인 절차에 진입하려는 단계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파장과 우리의 시사점」에 관한 토론

고경민 (제주대)

1. 연구의 의의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다민족국가인 ‘미국 공동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주요 대외전략의 하나로 추진하는 미국이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세계 공동체의 위기’라 할 만함.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성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구촌의 시대정신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 또는 인접한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이 점에서 이 발제문은 오늘의 대주제인 「세계 공동체의 위기와 평화(세계)」에서 논의 되기에 적절한 주제라고 평가됨.
- 이 발제문은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 파장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간명하게 정리된 연구로 보임.
 -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국내에서도 시사적인 다양한 논평 페이지들이 제출되었는데, 그런 페이지들은 대선 결과 분석, 미국 내 정치적 다이내믹스, 대외 안보/경제정책, 대 아시아/한반도 정책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인 데 비해, 이 글은 이민정책이라는 보다 세부적인 논쟁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음.
 - 이 점에서 이 발제문은 이민/난민 관련 공화당/트럼프의 공약과 이민 관련 ‘행정명령 13769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의 일단과 향후의 정책적 행보를 가늠케 해주는 의미 있는 글인 것으로 보임.

- 사실, 그동안 미국의 이민정책이 국내 사회와 학계에 이처럼 관심을 끌게 했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발제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통해 미국 사회에 불어닥친 이른바 ‘트럼프 현상’에 대한 논의의 한 단초를 제기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토론자는 상호 연관된 두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할 것임.

2. 트럼프 이민정책의 지지 동인

- 발제문의 내용처럼 왜 그렇게 파격적인 이민정책이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았는가?.
- 2016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내세운 이념적 ‘고립주의’, 정치적 ‘포퓰리즘’의 승리인 것으로 평가됨.
- 다소 부정적인 의미의 고립주의와 포퓰리즘이 설득력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기득권과 주류 세력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반감이 미국사회 내의 아웃사이드들을 결집시켰고, 트럼프는 특유의 비즈니스 감각을 활용하여 그러한 미국민의 밑바닥 정서를 파고들어 승리를 견인한 것으로 보임.
- 비(非) 미국적인 고립주의 이념과 비민주적인 포퓰리즘이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얻게 된 배경에는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것이 ‘shy Trump’의 주축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학력/저소득 백인층’의 좌절/분노와 결합한 결과로 보임.
- 최근 미국의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빈곤지수가 높은 주일수록 트럼프 지지가 높았다는 분석이 있음.
- 미국의 ‘저학력/저소득 백인층’은 이민자의 유입, 특히 히스패닉계의 대대적 유입이 자신들의 빈곤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임.
-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사회적 양극화로 실의에 빠진 ‘저학력/저소득 백인층’의 반이민 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고립주의의 산물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미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확산이라는 비(非) 평화 상태가 ‘트럼프 현상’과 그의 역행적 이민정책의 단초라고 할 수 있음.

3. 세계 공동체의 위기와 평화 문제: ‘적극적 평화론’의 시각

- 오늘의 대주제의 키워드가 ‘평화’인 만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평화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인들에게 빈곤과 차별,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양극화는 불편함을 넘어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평화롭지 않은, 즉 비평화(peaceless)를 느끼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사회적이고 구조적으로 형성된 빈곤, 차별, 불평등은 평화학의 창시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가 위협 받는 대표적인 상황임.
 - 갈통은 적극적 평화와 대비하여 폭력/전쟁의 부재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개념화함.
- 갈통의 평화론의 시각에서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전통 안보, 즉 소극적 평화에 초점을 맞춘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세계적인 분쟁 지역에는 어김 없이 미국이 개입하면서 세계적 세력 균형의 추 역할을 해 왔음.
 - 그런데 미국 내에서 가속화되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미국민, 특히 ‘저학력/저소득 백인층’의 좌절과 분노를 정책적으로 포용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었음.
 - 갈통의 시각을 따르면, 미국은 대외적으로 소극적 평화를 증진하는 데는 높은 관심을 가져 왔지만, 국내적으로 적극적 평화를 증진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임.
 - 이처럼, 국내의 적극적 평화에 대한 저조한 관심이 기득권을 가진 주류의 기성 정치에 반기를 들게 했던 것임.
-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강화되는 사회적 양극화는 비평화의 주요 요인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즉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함.
 -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와 개인적 평화의 붕괴는 ‘통치(governing)의 위기’를 넘어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 이러한 위기는 미국에서처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배타적인 애국주의를 낳고, 이것이 전 세계적 파장으로 확대될 때, 세계 공동체의 위기로 파급될 수 있음.
-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낯선 미국의 모습임.
- 이러한 문제에서 갈수록 양극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4. 맺음말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행정명령 13개에 서명하면서 대선공약을 숨가쁘게 이행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과 불법이민자 추방은 이민정책과 관련된 행정 명령임.
 -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전 세계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자초했음.
- 공동체의 평화는 전쟁과 폭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빈곤, 불평등, 차별 같은 비평화 상태의 해소가 중요함.
 - 극단적 국익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미국민 일부 계층의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름.
 - 그러나 편향된 미국의 이민정책은 미국이 애써 회복하려 해 왔던 소프트 파워(soft power)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세계적 영향력의 퇴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더 나아가 지구촌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와해하고 문화적·인종주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상생적 포용을 통한 공존적 이민정책이 사회와 국가를 더욱 결속시키고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평화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음.

『평화와 종교』 제3호 원고모집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평화종교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평화와 종교』 제3호 기고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원고마감일: 2017년 4월 30일(日)까지 원고를 받습니다.
2. 주 제: 『평화와 종교』는 평화사상과 그 일반, 종교사상과 그 일반 등에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논문 투고는 학회메일(kaprs@naver.com)로 보내주시고 투고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원고분량: 분량은 A4용지 20매 또는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심사 및 게재원칙
 - 1) 투고하시는 분은 투고와 동시에 연회비를 학회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공동저자일 경우 게재가로 확정되면 모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3) 심사는 해당전공분야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4) 동일기관 소속논문은 해당 호에 2편까지 게재 가능합니다.
 - 5) 투고후 심사비는 없으며 심사후 게재확정시에는 소정의 게재비가 지급됩니다.
6. 투고사항은 한국평화종교학회 홈페이지(www.kaprs.org) 투고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 기타 일반사항은 학회사무국(041-530-888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평화종교학회 편집위원회

2017 한국평화종교학회 임원명단

직책	성명	소속
고문	김동규	고려대
	손대오	선문대
	김항제	선문대
	토마스 셸로버	선학유피대학원대
학회장	이재영	선문대
부회장	조규성	한경대
	우종춘	강원대
	조광명	선학유피대학원대
총무위원장	오규영	선문대
총무이사	김민지	선문대
	강화명	선문대
총무위원	김인수	선학유피대학원대
총무간사	박수미	선문대
편집위원장	주재완	선문대
편집이사	고경민	제주대
	나형민	경희대
	박병철	동아대
	안연희	선문대
	오기성	경인교대
	이찬수	서울대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지충남	전남대
황진수	선학유피대학원대	
기획위원장	이원삼	선문대
기획이사	주우철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임현진	선학유피대학원대
연구위원장	이재일	선문대
연구이사	정시구	선문대
	오택용	선문대
국제협력위원장	오영달	충남대
국제협력이사	도현섭	선학유피대학원대
	황원재	테네시대(미)
감사	이강일	세한대
	정진완	선문대